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분석

- OECD 가입 국가를 중심으로 -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 현 수

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분석

- OECD 가입 국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상 헌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 현 수

정현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위 원 장 노 경 수 (인)

부 위 원 장 고 길 곤 (인)

위 원 김 상 헌 (인)

국 문 초 록

2003년 코피아난 UN 전 사무총장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근본적 원인을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1]. 국내·외 학자들도 이에 따라 테러에 대한 사례연구 및 평가, 그리고 대응책 등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다양한 연구결과와 대안 속에 한 가지 공통되는 의견은 '테러의 원인은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테러발생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요인을 찾고 분석하려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테러의 사건을 연구하였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국한하여 테러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테러사건을 대상으로 할 경우와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대상으로 할 경우, 테러의 발생 원인은 다를 것이다. 세계의 테러가 주로 중동 국가를 위시한 특정지역,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후진 국가 혹은 종교적·민족적 갈등에서 오는 다민족 국가들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한다면 다분히 선진국에서의 테러발생 원인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1년 중동에서는 1,488건의 테러가 발생하였고 同年 전 세계적으로는 테러건수가 3,542건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 중동지역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테러정세, 2011).

그러나, 정치, 경제 및 사회적으로 안정된 주요 선진국도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그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선진국에 맞는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한국 등 주요 선진국의 테러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對테러 정책을 세우는 데는

1) http://www.un.org/News/Press/docs/2003/sgsm8885.doc.htm
(검색일 2013. 2. 12)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가라 할 수 있는 OECD 32개국[2]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연구기간도 2007 ~ 2012년 즉, 최근 6년간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발생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테러발생 원인을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OLS 모형과 Tobit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테러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정치적 요소인 조직적 분쟁(Organized Conflicts)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또 다른 종속변수인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인인 무기접근성(Access to the Weapons)에서 테러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두 모형 모두에서 분석되었다. 또한, Tobit 모형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OLS 모형에서는 폭력시위(Violent Demonstration)와 폭력범죄(Violent Crime)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 등 선진국에서는 조직적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요소 즉, 탈북자,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소외받는 계층 등 소수자가 차별 받거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폭력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곧 테러로 이어질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접근성 또한, 선진국에서의 테러발생 원인으로 분석되었는 바, 총기 및 폭발물 등 무기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테러발생에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대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총포류 및 폭발물 등에 대한 제조, 유통, 소유를 현행처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외국인에 의한 공항만에서 밀수되는 총기류에 대해서도 세관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테러리즘, 테러발생 요인, 테러발생 원인, 정치적 요소,
경제적 요소, 사회적 요소

학 번 : 2009-22068

2) 본 연구에서는 전체 34개국 중 2개국(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을 제외하였다.

목 차

제 1장 서 론 ····· 1

제 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5

제 3절 선행연구 ····· 7

1. 선행연구의 검토 ····· 7
   1) 테러발생 원인에 관한 국내 연구 ····· 7
   2) 테러발생 원인에 관한 국외 연구 ····· 10
2. 선행연구의 한계 ····· 15

제 2장 이론적 배경 ····· 17

제 1절 테러의 개념 ····· 17

1. 테러의 정의 ····· 17
2. 테러의 유형 및 분류 ····· 20

제 2절 국가별 환경과 테러와의 관계 ····· 23

1. 정치적 요인과 테러와의 관계 ····· 24

1) 정치적 불안정 (Political Instability) ····· 26
2) 조직적 분쟁 (Organized Conflicts) ····· 27
3) 폭력성 시위 (Violent Demonstrations) ····· 28

2. 경제적 요인과 테러와의 관계 ····· 29

1) 1인당 국민소득 (GDP per Capita) ····· 30
2) 실업률 (Unemployment) ····· 31
3)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 32

3. 사회적 요인과 테러와의 관계 ····· 33

1) 폭력범죄 (Violent Crime) ····· 33
2) 무기 접근성 (Access to Weapons) ····· 34

제 3절 세계평화지수 (Global Peace Index) ····· 35

1. 평화의 개념 ····· 35
2. GPI (Global Peace Index) 개념과 산출지표 ····· 37
3. GPI 비판 및 의의 ····· 38

제 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40

제 1절 연구모형 및 설계 ····· 40

제 2절 연구문제 및 가설 ····· 41

제 3절 연구의 변수 설정 ····· 42

1. 종속변수 ····· 42

2. 독립변수 ····· 43

1) 정치적 요인 ····· 43

2) 경제적 요인 ····· 44

3) 사회적 요인 ····· 45

3. 통제변수 ····· 46

1) 교육수준 (Mean years of schooling) ····· 46

2) 인구수 (population) ····· 46

3) 시간 변수 ····· 47

4) 문화 변수 ····· 47

제 4절 분석기법 ····· 47

제 4장 연구결과 및 논의 ····· 50

제 1절 기초 통계량 분석 ····· 50

제 2절 가설검증 및 분석 ····· 51

1. 정치적 요인과 테러발생 ····· 51

2. 경제적 요인과 테러발생 ····· 55

3. 사회적 요인과 테러발생 ····· 57

4. 단순통합회귀모형 (Pooled OLS Estimation) ····· 60

5. 토빗 회귀분석 모형 (Tobit OLS Estimation) ····· 64

제 5장 국가별 테러발생 사례분석 ····· 71

제 1절「조직적 분쟁」에 의한 국가별 테러발생 사례 ····· 73

1. 터 키 ····· 73
2. 스 페 인 ····· 76
3. 영 국 ····· 79
   1) 영국의 역사와 아일랜드의 독립 ····· 79
   2) 주요 테러사건과 발생원인 ····· 82
4. 평 가 ····· 84

제 2절「정치적 불안정」에 의한 테러발생 사례 :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 85

1. 이탈리아 현대사와 테러의 발생 ····· 85
   1) 1970년대 이탈리아 테러리즘 ····· 85
   2) 1980년대 이탈리아 테러리즘 ····· 86
   3) 1990년대 이탈리아 테러리즘 ····· 87
2. 붉은 여단 (Red Brigades) ····· 88

제 3절「1인당 GDP」,「Gini 계수」에 의한 테러발생 사례 : 칠레를 중심으로 ····· 89

1. 칠레 역사 및 테러사건 ····· 90
2. 테러발생 원인분석 ····· 93

제 4절「실업률」,「폭력시위」에 의한 테러발생
사례 : 그리스를 중심으로 ····· 94

1. 그리스 사회와 테러 ····· 94
2. 테러발생 원인분석 ····· 96

제 5절「폭력범죄」,「무기접근성」에 의한
테러발생 사례 : 멕시코를 중심으로 ···· 97

1.「폭력범죄」에 의한 테러발생 ····· 97
2.「무기 접근성」에 의한 테러발생 ····· 100

제 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03

제 1절 OLS 모형과 Tobit 모형 분석결과 ····· 103

제 2절 사례연구 분석결과 ····· 105

제 3절 연구한계 및 미래연구 방향 ····· 110

< 참 고 문 헌 > ····· 112

부 록 : GPI 지표 개념 및 종류 ····· 118

< Abstract > ····· 130

표 목 차

< 표 1 - 1 > 기존의 문헌연구 ····· 14

< 표 2 - 1 > 테러리즘에 대한 6가지 분류 ····· 21

< 표 4 - 1 > 기초 통계표 ····· 50

< 표 4 - 2 > 정치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未포함 ·· 51

< 표 4 - 3 > 정치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포함 ·· 52

< 표 4 - 4 > 경제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未포함 ·· 55

< 표 4 - 5 > 경제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포함 · 56

< 표 4 - 6 >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未포함 ·· 58

< 표 4 - 7 >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포함 · 59

< 표 4 - 8 >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未포함 ····· 61

< 표 4 - 9 >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포함 ····· 62

< 표 4-10 >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未포함 (OLS 모형 Vs. Tobit 모형) ····· 65

< 표 4-11 >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포함 (OLS 모형 Vs. Tobit 모형) ····· 67

< 표 4 - 12 > 연구결과의 요약 ····· 69

< 표 5 - 1 > 국가별 연평균 테러발생건수 및 순위 ····· 71

< 표 6 - 1 > GPI 출처 및 정의 ····· 120
< 표 6 - 2 > 민주주의와 투명성 ····· 124
< 표 6 - 3 > 국제적 개방성 ····· 126
< 표 6 - 4 > 인구통계학 ····· 126
< 표 6 - 5 > 지역 및 국제역학 구조 ····· 127
< 표 6 - 6 > 교육 지표 ····· 127
< 표 6 - 7 > 문화 지표 ····· 125
< 표 6 - 8 > 물질적 행복 ····· 129

그 림 목 차

< 그림 3 - 1 > 연구분석의 틀 ····· 40
< 그림 3 - 2 > 종속변수인 테러발생 빈도의 분포 ····· 49
< 그림 5 - 1 > 쿠르드族 주요 분포 및 활동지역(주황색) ····· 75
< 그림 5 - 2 > 바스크 지역 위치 및 7개 지방 ····· 77
< 그림 5 - 3 > 브리튼 제도의 오일러 도표 (Euler Diagram) ····· 80
< 그림 5 - 4 > 주요 마약카르텔 거점 및 불법무기 유입 경로 ····· 101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테러는 오랜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아 왔었다. 그 이유는 테러 발생은 개인들에게는 인명적·재산적·정신적 피해와 충격을 주고 지역과 국가에게는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무척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6년간 세계 주요 선진국가라 할 수 있는 OECD 32개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미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테러 잠재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을 비롯하여 각 국가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테러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비책을 꾸준히 강구하였다. 자국 및 타국에서 발생한 테러의 배후는 누구이며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과 후속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각 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국내에서의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위협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내어 테러 예방에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된 이래 북한에 의한 수많은 군사적 도발으로 남한 사회의 혼란과 정치적 불안이 조성되었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서부터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요인에 대한 테러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등의 외국인들과 그들의 2세들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들 중 일부는 한국사회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한 정부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국격 향상과 위상 제고에 따른 국군 파병 등으로 국제테러단체로부터 한국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최진태, 2010).

작금의 현실은 우리나라가 북한뿐만 아니라 테러 주도 국가라 할 수 있는 이슬람 단체에 의해서도 지속적인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증가됨으로써 한국이 테러 대상국으로 분류가 되는 양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즉,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6년간의 테러발생에 미친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테러 정책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테러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만 대테러 정책을 수립하고 테러와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Kofi Annan, 2003).

한국을 배경으로 테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최근 세계 안보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에 적합한 테러발생 요인을 객관적인 수치로 정리한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 연구에서도 테러 발생 원인이 테러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그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테러 발생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나 후진국을 중심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국가들의 테러사건을 계량하거나 사례연구를 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잦은 테러로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에서 만들어진 연구 자료들로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원인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에서 발생되는 테러의 요인과 이와 반대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후진국 등에서 발생하는 테러 발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테러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테러의 사건을 분석하여 그 주요 원인을 찾아 한국적 특징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에서는 어떤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테러가 발생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취지가 선진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이 왜 발생하였는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사회적으로 혼란한 후진국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국가 즉, 선진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분석 단위는 개별 국가가 된다.

OECD 가입 국가가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전체 OECD 가입국가 34개국[3] 중 연구에 적합하지 않는 2개국 -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을 제외한 32개국 국가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이들 제외된 2개국 즉, 아이슬란드는 지리적으로 이격되어 있으며 자체 군대도 없고, 룩셈부르크는 2012년 기준 인구 103,641명의 국가로서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성우(2009)는 표본의 선택과 관련하여 국가들의 현실적인 역학관계, 예를 들면 국제관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연구로서 의미 있는 국가로 보았으며, 국가 존재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는 국

3) OECD 회원국가(34개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으로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가 제외된 32개국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들 혹은 국제관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국가들의 경우 등은 연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 이론적 적절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국가경제 규모 등을 기준으로 표본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의견은 테러의 발생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테러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병행하여 그 영향요인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성(Political Instability), 조직적 충돌(Organized Conflicts), 폭력시위(Violent Demonstrations)의 3가지로 소분류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정립을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으로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 실업률(Unemployment),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로 소분류하였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으로 폭력범죄(Violent Crime)와 무기접근성(Access to Weapons)을 소분류하여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로는 테러발생건수와 인구를 통제하기 위하여 백만명당 테러발생건수 두 가지로 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한 테러발생건수는 국가정보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테러정세를 기초로 하였다.

다음은 연구시기의 범위이다.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와는 달리, 최근 6년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해외연구 자료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 2차 대전이 끝나는 시대부터의 현재 발생하는 테러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기간은 다양했다. 그러나, 이런 과거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보환경이 지속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는 과거대로의 가치가 있으나 현 시대에로의 적용은 무리수가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시간적 한계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자료가 확보된 2012년까

4) Exploring Root and Trigger Causes of Terrorism, 2007, p.3, www.transnationalterrorism.eu (검색일 2013. 6.20)

지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기를 최근 6년간에 발생한 테러사건을 중심으로 테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한국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국가라 천명하였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미약한 바, 본 연구에서는 어떤 영향요소가 테러 발생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OECD에 가입된 우리나라의 테러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정립을 위해 문헌적 연구방법과 선진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계량분석 그리고, 계량분석의 평균값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례연구 방법 등으로 연구를 하였다.

먼저, 문헌적 고찰을 통한 선행연구로 학위 및 학술지 논문, 단행본 및 뉴스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독립변수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다졌고 테러의 정의 및 분류, 주요 발생원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을 위한 각 국가별 특성 즉, 역사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각 국가별 특성치인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에 해당하는 8가지 독립변수는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또, 종속변수로 취하고 있는 각 국가별 테러사건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집계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인구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백만 명당 테러사건을 종속변수로 추가하였다.

정치적 요소로서 ⅰ) 정치적 불안정성, ⅱ) 조직적 분쟁, ⅲ) 폭력시위, 경제적 요인으로는 ⅳ) 1인당 국민소득, ⅴ) 실업률, ⅵ) 지니계수, 사

회적 요인으로 ⅶ) 폭력범죄와 ⅷ) 무기접근성을 그 테러발생 영향 요인으로 각각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테러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통계분석는 SA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회귀분석과 토빗(Tobit)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한 그 영향요인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는 계량적 통계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가 갖는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와 더불어 사례연구(Case Study)도 실시하였는 바, 이는 계량연구가 가지는 피상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Edward Newman(2006)은 질적 사례연구가 다른 설명변수들과 관련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근본원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테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테러가 발생했던 국가를 찾아 심층분석을 하였다. 조직적 분쟁이 주요한 영향요소가 되어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스페인과 터키를 사례 연구하였고, 1인당 GDP 및 Gini계수에 의한 테러사건이 발생 원인으로 분석된 칠레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실업률과 폭력시위에 의해 테러가 주 원인으로 작용한 그리스를 찾아 심층 분석하였으며, 정치적 불안정성, 폭력범죄, 무기 접근성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분석된 멕시코를 선정하여 테러발생의 원인 분석을 위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이 계량분석과 사례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여 각 연구방법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양적, 질적 연구방법이 갖는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과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연구방법과 연구범위에 따라 본 연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테러발생 요인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들 선행연

구의 한계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 2장에서는 다양한 테러의 정의와 유형과 분류를 소개하였고 특히, 테러의 정의를 다시 함축하여 요약하였다. 또한, 국가별 환경과 테러와의 관계성 즉, 테러발생 요인 8가지에 대해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여 독립변수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자료의 주요 출처인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였다.

제 3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 부연 설명을 하였다. 제 4장에서는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OLS와 Tobit 모형을 SAS 통계패키지를 활용, 실증 분석하여 연구 가설들의 검증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고 있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구결과의 요약과 본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본 연구 자료의 주요 출처로 활용되고 있는 GPI 개념 및 지표를 번역하여 각각의 정의와 산출방법을 소개하고 정리하였다.

제 3절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검토

1) 테러 발생 원인에 관한 국내 연구

테러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중 하나로 테러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주요인은 무엇인지 등은 테러연구의 주요 연구과제 중 하나였다. 이러한 테러 발생의 주요 요인 혹은 영향요소를 분석하여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대비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김인걸(2013)은 국가 수준 지표를 활용한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적용하여 테러 사건의 발생요인을 검토하였다. 그는 국가나 사회의 어떤 요인이 테러를 유도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테러리즘으로 발전하는지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1992년에 발표된 Agnew의 긴장이론을 통해 테러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과 국가별 테러빈도와의 관계를 찾고자 하였으며 긴장요인, 조건요인, 매개요인인 부정적 감정을 테러발생빈도와 일반긴장이론을 근거로 모형을 만들어 연구하였다.

그는 긴장요인으로 첫째, 희생자를 동반하는 수준의 긴장, 둘째, 불공정, 그리고 권력집단이 그들과 유대가 약한 집단에게 강요하는 긴장들이 테러를 발생하는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여기에 긴장이 모두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테러도 긴장을 가진 모든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면서 이러한 긴장요인들이 테러리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요인들로 ⅰ) 사회적 지원 가용성, ⅱ) 사회통제 유지, ⅲ) 개인적 특성, 마지막으로 ⅳ) 사회구성원들의 테러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들었다.

그러나, 그가 설정한 테러발생의 주요인으로 지목한 긴장요인, 조건요인, 부정적 감정들이 테러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실증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그의 연구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구(2010)는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을 사회·심리이론, 폭력이론, 국제정치구조이론 및 현대사회구조이론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사회·심리 이론에서 거(Ted R. Gurr)의 상대적 박탈감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을 바탕으로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상대적 박탈감이라 했으며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들과 실제로 그들이 향유하는 현실적 조건간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사회·심리적 긴장을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의 하나로 보았다. 여기서, 거(Ted R. Gurr)의 상대적 박탈감이론은 사회

적 욕구 형성도가 사회적 욕구 불만족을 훨씬 초과할 경우 사회·심리적으로 좌절감이 형성되고 이것은 곧, 폭력적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테러리즘이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폭력행사의 연장선상에 기인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창호·김세진(2011)은 테러리스트의 성장환경 및 심리상태와 관련한 심리적 동기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을 근거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좌절-공격(Frustration-Aggression) 가설로서 정치적, 경제적 혹은 개인적인 목표가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거나 좌절될 때 각자의 경험이나 학습에 따라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이에 대한 대항으로 테러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부정적인 정체성(Negative Identity) 가설이다. 이 가설은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경험을 겪으면서 정신적,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아로 형성된 후, 이러한 문제성 있는 자아가 결국에는 정신적인 이상이나 타인에 대한 공격성 즉, 테러행위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셋째, 자기애적 격노(Narcissistic Rage) 가설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과대화하여서 오만하고 반사회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실패와 좋지 않은 것들의 원인은 자신이 아닌 나머지에 있다고 생각하여 타인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줌으로써 스스로 만족하고 좌절 상황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진태(2010)는 한국이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테러잠재국가라고 하여 국외적 위협요소와 국내적 위협요소로 나누어 상세한 연구를 하였다.

국제 위협요소로 먼저, 국내 출국자의 증가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었고 아랍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테러의 무차별적인 공격대상이라는 점에서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군의 해외파견으로 국제테러단체로부터 테러대상국가로의 등극이다. 한국이 미국주도의 테러정책의 일원으로 참

가하고 있어 특히, 아랍 국가에서는 비록 한국군의 파병은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 목적이지만 미국과 같은 적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신교 단체의 공격적 선교에 따른 해당 국가와의 갈등 유발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선교전략은 직접 선교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 전체에 반감을 심어주어 테러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내 위협요소로는 북한에 의한 테러의 잠재성이 계속 남아 있고, 외국인 체류자 및 북한 이탈주민의 증가가 테러의 잠재적인 위협요인이라 하였다. 2004년 3월 스페인 열차테러와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 테러의 공통점은 모두 자생테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주민 그리고 그들의 2세가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고통을 받거나 좌절감에 빠져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스페인과 영국의 런던 테러 사례처럼 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의 안보환경변화를 직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테러 발생 원인에 관한 국외 연구

Joseph(2009)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테러에 대한 다각적인 견해가 있었다고 하며 인구증가, 빈곤, 도시화, 전통적 권위의 붕괴 및 세계화가 그 원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철학, 종교, 정치 및 다른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어 테러리즘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에 대응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우리의 지식보다는 테러리즘의 결정요인 즉,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의 모집에 지원하는 조건들을 포함한 결정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와 같이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테러리즘

이 정치적인 원인에 있다면 인종적 혹은 민족적 충돌의 발생은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테러리즘이 빈곤한 가운데 발생한다고 하면 경제적 발전이 그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외,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수 없이 많다고 하면서 테러리즘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여 한 가지 원인이나 일련의 원인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하였다.

또한, 테러리스트의 마인드(Terrorist Mind) 즉, 테러리스트의 개인적 성격 혹은 어떤 심리적 요인도 테러리즘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으며, 테러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을 고립시키거나 테러 지원자들을 막는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이지, 테러리즘을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테러리즘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발생되고 이는 역사적, 문화적, 인구통계학적 관점 등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러리스트의 행동과 동기는 개인과 단체에 따라 다르며 국가 혹은 지역 그리고 종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하면서 오늘날 테러리즘에 있어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실패한 국가(Failed State)[5]에서 기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dward Newman(2006)은 사회적 조건과 테러리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 조직에 대한 특성과 목적, 리더십, 그 조직의 지지자 혹은 정보원에 대한 주요 배경, 그리고 사회적 기반 등의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연구는 테러리즘의 형태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테러리즘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대테러정책에 있어 중요

---

5) 실패한 국가(failed state)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지만 1957년에 설립된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Fund for Peace(www.fundforpeace.org)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성격의 국가를 일컫는다고 하고 있다.
- 국가 지배력 상실 혹은 물리적 힘에 의한 법의 독점적 지배
-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적법적 권의(authority legitimate)의 부패
- 공공서비스 부재
-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서의 他국가와의 관계 부재

하다면서 비록 단기간에 사회·경제적 여건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은 대테러정책에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결국, 사회 및 경제적 추세, 도시화, 인구변동 등은 테러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개발원조,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 인권, 소수민 인권의 증진과 보호,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한 개선 등과 같은 장기적인 대테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테러리즘에 있어 근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데 가장 먼저, 빈곤을 테러리즘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빈곤이 분노와 절망과 정치적 극단주의를 양산시킨다고 하면서 테러리즘과 사회적 조건은 매우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그는 급격한 인구증가, 다른 인종사회로의 인구 이동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또 다른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예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이민 등 인구변동으로 인하여 테러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로 실업과 빈곤과 관련이 있는 도시화를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농경지와 물 부족은 농경사회를 파괴하게 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불결한 도시의 슬램가로 모이게 되어 그들의 주장과 표현이 쉽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범죄, 질병, 폭력과 가정 붕괴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환경아래 테러리스트 조직원으로 쉽게 유입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외 강탈, 인권학대, 소외 그리고 굴욕이 충돌과 폭력의 원인이고 이는 곧 테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념적 혹은 종교적 테러리즘과 관련된 가치의 충돌이 테러리즘의 근원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Alan & Jitka(2003)는 교육과 빈곤이 테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많은 문헌에서는 교육과 빈곤의 부족은 테러와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 혹은 범죄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나, 이러 요소들이 테러리즘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들은 테러의 결정요인으로 테러리스트 조직에 참여하는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ⅰ) 증오범죄(hate crimes)의 결정요인, ⅱ)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지구(West Bank & Gaza Strip)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폭력과 테러리즘에 관한 설문조사, ⅲ) 헤즈볼라에 참여하는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통계분석, ⅳ) 팔레스타인 자살폭발 단원들의 전기적인 증거(biographical evidence)와 1980년대 테러리스트로 활동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배경, 마지막으로 ⅴ) 경제적인 조건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에 나열된 경우처럼 Alan & Jitka의 연구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연구를 수행하여 교육과 경제적 요건, 특히, 빈곤과 테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결론적으로 낮은 경제적인 요인 즉, 빈곤이 테러단체에 참여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면 테러단체에 참여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다시 말해, 빈곤하다고 테러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수준이 높다하여 테러단체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존 테러에 대한 문헌들은 테러의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역사적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테러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도 있다.

그 외 다른 선행연구들은 <표 1-1>에서 보듯이 Krisztina, Helge & Gunther (2010)가 작성한 테러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기존 실증적 연구들을 정리한 것으로 일부만 발췌하였다.

<표 1-1> 기존의 문헌연구

Author	Coverage	Econometric Method	Main Result		Remarks
			Economic	Political	
Abadie (2006)	186개 국가 2003~2004	Cross-section OLS and IV	GDPpc 의미 없음	정치적 권리가 테러의 발생을 줄임	내생변수로서 테러위협
Blomberg & Hess (2008a)	179개 국가 1968~2003	Cross-country averages and panel : Tobit und poisson	GDPpc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테러에 영향	민주화지수는 모든 국가와 테러와 양의 상관	
Krueger and Laitin (2008)	150개 국가 1997~2002	Nagative binomial cross-section model	GDPpc는 테러의 발생을 낮추고 타국에 대한 테러는 증가시킨다.	낮은 시민의 자유는 테러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Blomberg (2004)	127개 국가 1968~1991	Markov process estimation	높은 소득 국가는 더 많은 테러를 경험	민주주의는 더 많은 테러를 경험	경기위축은 테러의 가능성을 증가
Bravo & Dias (2006)	121개 국가 1997~2004	OLS+	HDI가 테러사건을 감소시킴	다원적 시스템이 테러를 감소시킴	
Campos & Gassebner (2009)	130개 국가 1972~2003	Fixed effects negative binomial panel model	GDPpc는 발생률에 무의미하나 사망자수는 증가시킴	정치적 자유가 테러를 증가시킴(발생률과 사망자수)	2개의 내생변수 : 사건수 및 사망자수
Goldstein(2005)	169개 국가 2003~2004	OLS	GDPcp는 의미 없으나 특별한 경우 테러를 감소시킴	정치적 권리의 부족은 테러를 증가시킴	Abadie (2006)과 같은 결론

* GDPpc : GDP per capita
* HDI : Human Development Index

2. 선행연구의 한계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테러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기간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혹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기존의 테러 발생에 대한 다수 연구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된 모든 알려진 사건들을 다루는 것은 지금까지 수 없이 세계의 정세가 바뀌었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의 테러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발생요인,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들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 이어졌고 갓 태어난 신생국의 경우 민주주의의 미숙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었으며 이러한 혼란기에 1960년대 미, 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는 전 세계를 양극화로 나누었었다. 또한, 1970년대 화해 무드를 거쳐 1980·90년대에는 공산권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이 급속히 진행된 역동의 시기로서 20세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역동적 시대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들, 테러사건뿐만 아니라, 군사도발, 게릴라전술, 요인암살 등을 대상으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연구한 기존 연구결과를 현 시점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테러사건을 중심으로 계량연구 또는 사례연구 등을 실시해야 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대적 범위를 최근 6년간으로 한정하여 연구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고 이는 곧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의 범주에서도 선행연구의 한계를 제기할 수 있다. 테러가 주로 중동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특수한 환경에 놓인 국가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불안정인 국가의 경

우는 권력 쟁탈과정에서, 소수민족의 억압과 피지배에 대해서는 비정규적인 성격의 도전에서, 또 한편으로는 요인에 대한 암살 등을 통하여 테러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터키, 스페인, 러시아의 경우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중앙정부에 대한 도전이나 역사적, 지리적 혹은 종교적, 인종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테러의 행위를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즉, 잦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와 같은 테러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역사적·문화적·정치적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선진국 혹은 강력한 독재 국가에서는 테러의 발생이 없거나 낮은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테러사건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을 이루고 있는 주요 선진국을 비롯하여 테러 발생이 낮은 개별 국가 혹은 테러발생 잠재국가에 적용하기에는 그 연구결과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OECD회원 국가들의 최근 6년간의 테러발생 건수와 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테러발생에 미친 영향요인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통계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터키, 스페인, 칠레, 그리스, 멕시코 등 5개국을 선별하여 테러사건의 발생 원인을 심층 있게 분석하였다.

즉, 테러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회 환경 및 국가안보의 변화에 따라 한국을 잠재적 테러 발생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은 만큼, 본 연구의 결과를 주요 선진국가의 하나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테러의 개념

1. 테러의 정의

정부기관 혹은 학자들이 정의한 테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안보환경 등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논문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정의내리기는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Hoffman(1999)은 테러 혹은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테러리즘에 대한 의미가 지난 2백년간 걸쳐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동련(2005)은 테러리즘의 개념정립이 어려운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주체와 그에 대상이 되는 측이 서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홍남(2008)은 국가, 지역, 정치적 이념에 따라 테러리즘의 동기와 원인 및 테러리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기관 혹은 학자들에 의한 정의를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기로 한다.

이상구(2010)는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 사용에 의한 위협, 정치적 동기, 조직적인 사전준비, 무차별적인 공격 양상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측면을 제시 못하고 있는데 이는 테러리즘의 양태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최근 변화하는 테러리즘의 양상과 목적 등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테러리즘은 주권국가 혹은 특정 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적이

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심리적 폭력행위의 총칭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신동련(2005)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를 하고, 폭력행사 대상에 민간인 및 사유재산을 포함시키며, 폭력행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테러의 대상 설정과 무관하며, 테러에는 주체와 대상이 있는데 이들 간에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문영석(2010)은 테러리즘이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대중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정치적 폭력의 한 형태라고 하고 여기에는 종교적 원리주의자에 의한 갈등과 편협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했다.

Hoffman(1999)은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폭력이나 폭력 위협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테러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즘은 테러리스트 공격물이나 즉각적인 희생을 넘어 훨씬 더 큰 심리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즉, 상대 민족이나 종교단체 혹은 나라 전체, 정부 혹은 정당 등 더 넓은 목표물을 대상으로 공포를 심어주고 겁을 주여 그들에게 없었던 정치적 변화를 위한 영향력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Moghaddam(2006)은 테러리즘이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의 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개인, 단체 혹은 국가지원에 의해 수행되는 테러의 공포와 절망을 의도적으로 가져오는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폭력이라 했다.

세계평화지수(GPI)를 산정하는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IEP)에서는 "비국가단체가 공포, 강압, 협박의 방법으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혹은 사회적 목적을 취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힘이나 폭력의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인항공기 폭격과 같은 사상자의 결과를 초래하는 이미 인지된 정부테러(State Terror)와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美 국무부에서는 1983년 이래 “테러리즘이란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 단체나 개인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되어 비전투 목표물에 대해 범해지는 폭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또한, “국제 테러리즘이란 한 국가 이상의 시민이나 지역이 포함된 테러”라고 규정하고 있다.

EU보고서「Exploring Root and Trigger Causes of Terrorsm」에서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경우, 정부나 국제기관에 어떠한 행위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경우, 국가 혹은 국제기구의 정치적, 헌법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등을 테러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훈령 제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 테러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ⅰ)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ⅱ)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 억류·감금, ⅲ)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ⅳ)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ⅴ) 운항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ⅵ)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ⅶ)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항해시설의 파괴, ⅷ)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ⅸ)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강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사건과 일반사건의 구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홍남(2008)은 테러리즘을 정치적 성격이 있는 범죄행위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즘과 일반 범죄를 구분할 의미가 없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공격행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목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향에서 최근 자살폭탄테러와 서방기자 납치, 암살, 몸값 요구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와 평화적인 정책들을 위태롭게 하며 국제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폭력과 협박 등이 동반해야 한다. 이는, 공격에 의한 희생자보다는 더 많은 대중에게 공포를 주어 원하는 바를 어필하는 것이다.

넷째, 소말리아의 해적, 멕시코의 마약카르텔 등 조직 자체를 위한 행위도 테러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섯째, 개인적인 동기라도 자신의 과신 등의 이유로 행한 경우도 테러에 포함되고 여기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행위도 포함이 된다.

여섯째, Saul(2006)이 기술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발생된 사건이 우발적이지 않아야 한다. 즉 의도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테러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테러사건이 될 수도 있고 일반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 다수가 폭탄이나 총기난사 등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테러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단독 혹은 소수일 경우 그 구분이 애매해진다. 또한, 1인 혹은 소수일 경우 대체적으로 그 대상이 국가 요인이나 정부관료 혹은 군, 경찰일 경우와 일반인일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데, 전자는 테러로 보는 경향이 좀 더 강하고 후자는 일반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이 역시 테러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2. 테러의 유형 및 분류

이성순(2006)은 연도별 테러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960년도에는 주로 외국 공관에 주둔하는 외교관 살해사건이 많았고 1970년대에는 대표적으로 북아일랜드 공화군(IRA)에 의한 폭탄테러와 이스라엘

선수단에 대한 테러 등으로 민간인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요인 암살시도가 늘었다고 하였다. 또, 1990년대에는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1990년대 특징을 유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량 피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흘렀다고 정리하였다.

테러리즘의 유형 및 종류에는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신동련(2005)은 테러리즘에 대해서 6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표 2-1>와 같이 표로다시 정리하였으며 어떠한 테러가 발생 시 그 테러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 가에 따라 그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테러의 구분과 분류 작업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표 2-1> 테러리즘에 대한 6가지 분류

분류 기준	종 류	특 징	비 고
형태에 따른 구분	Nationalist, Religious, State - Sponsored, Left-Wing, Right-Wing, Anarchist	▪ 테러단체의 이념에 의한 구분	테러의 목표와 원인을 중심으로 구분
주체에 따른 구분	개인에 의한 테러	▪ 단순하고 우발적임 ▪ 개인적 원한, 비관, 경제적 이유로 발생 ▪ 테러의 全과정이 매우 짧고 단발성 ▪ 테러의 주체는 죄의식을 갖음	
	집단에 의한 테러	▪ 집단 자체의 내부적 가치관과 규율이 있으나 매우 자의적이며 사명감이 있어 범죄의식이 없음 ▪ 항상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는 의식 팽배 ▪ 내부적인 위계질서 보다는 가치관에 의해 집단이 통제	소수민족 독립, 정권쟁취를 위한 테러 등

	국가 지원 테러(State-Sponsored Terror)	▪ 정치적 혹은 경제적 목적으로 테러 그룹을 만들고 지원하는 형태로, ▪ 국가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	▪ 아랍국가들의 알카에다 지원 ▪ 월맹의 베트콩 지원 등
	국가테러 (State Terror)	▪ 군대에 의한 무력사용으로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무차별적이고 대량학살 하는 경우 ▪ 일국에 의해 타국(상대적 약소국)이 침략을 받는 경우	대체로 제 3세계 국가에서 주장
목적에 의한 구분	개인적 동기	▪ 비관, 금전적 필요, 원한으로 발생 ▪ 개인적 동기의 은폐로 공공의 명분이 함께 존재	
	정치적 목적	▪ 소수민족의 독립을 위한 테러 ▪ 정권과 무관한 시민들은 테러의 대상이 아님	소수민족의 테러는 독립전쟁의 개념으로 파악
	문화·종교·인종적 차이에서 오는 테러	▪ 다른 이방인 모두가 테러 대상으로 모든 문명, 종교, 정치체계가 대상이 되어 국제화되는 속성 ▪ 신념에 의한 테러로 그 방법이 무차별적	
대상에 의한 구분	한정된 인사	▪ 개인적 동기에 의한 테러의 경우 ▪ 소수민족의 독립이 목표인 경우	
	불특정 다수	▪ 문화, 종교 혹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우 ▪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테러의 강도에 의한 구분	저강도 테러	▪ 단순위협, 개인적인 원한 등 소규모의 테러	
	고강도 테러	▪ 무차별적인 대량살상	자폭테러
활동 범위에 의한 구분	국내적인 테러	▪ 국내로 한정된 경우로 대부분 국내 치안 문제로 인권침해나 민주화 등	
	국제적인 테러	▪ 주체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고강도 테러가 대부분	

또, 김상범(2002)은 테러리즘의 유형을 조직의 형태, 발생요인, 그리고 수단 및 방법 등에 의해 그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테러를 수행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로, 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체제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행해지는 '반체제 테러리즘'과 현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국가지원 테러리즘'으로 분류하였고, 둘째는 종족 혹은 집단 간 갈등에서 수행되는 동기와 각 단체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인하여 발생되는 테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인암살, 인질 납치, 항공기 납치/폭발 혹은 자살폭탄 공격 등과 같은 수단 및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그는 발생요인에 의한 분류체계는 혁명적 테러리즘, 정치적 테러리즘, 민족주의적 테러리즘, 환경주의적 테러리즘, 종교적 테러리즘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제 2절 국가별 환경과 테러와의 관계

Krisztina, Helge & Gunther(2010)는 한 국가에서 테러단체가 만들어지고 테러가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그 나라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테러 발생에 관해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빈곤, 둘째, 민주주의 혹은 전체주의와 같은 정치적 시스템, 셋째, 정치적 안정성과 갈등을 들 수 있다고 하며 이들 3가지 이슈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Fearon & Laitin(2003)은 사회경제적 요소가 시민전쟁이나 반란 등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들은 1945 ~ 1999년간 127건의 시민전쟁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빈곤을 비롯하여 정치적 불안정성, 험란한 지형, 높은 인구밀도 등이 국내 정치적 충돌에 긍정적인 변인이라면서 이는 재정적으로나 관료적으로 약한 국가들이고 반란자들의 모집에 일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Muller & Weede(1990)는 1973 ~ 1977년간의 131개국에서의 분석결과 3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하였다. 하나는 국내 정치적 폭동일 경우, 정치적

억압이 높던지 아니면 낮은 단계의 억압보다는 중간단계에서의 억압일 때 테러의 발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경제적 성장이 높을 때 정치적 소요가 감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분리운동이 있는 경우는 테러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는 사례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터키와 스페인에서 발생한 테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Krisztina, Helge & Gunther(2010)는 테러발생 가능성은 1인당 GDP의 수준에 따라서 증가하며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으며 불안정성, 국내 갈등, 무정부 및 정권교체기에 테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또, Basuchoudhary & Shughart(2007)는 경제적 요인은 눈에 띄게 테러를 양성한다고 하였다.

정홍남(2008)은 개별적인 테러의 상당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건이 모두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테러 발생 원인에 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에서는 각 국가가 갖는 다양한 요소들 즉, ⅰ) 정치적 요인, ⅱ) 경제적 요인 , 그리고 ⅲ) 사회적 요인들로 인하여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들 3가지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치적 요인과 테러와의 관계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테러의 발생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은 테러의 발생 원인에 대해 역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Turk (1982)는 테러리즘이 더 쉬운 통신수단과 이념과 사상의 파급력 그리고 정치적 충돌이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을 들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다. Krisztina, Helge &

Gunther(2010)도 민주주의가 테러의 발생빈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Lai (2007)도 민주주의가 전제정치보다 더 많은 테러리스트를 양산한다고 하였다. 역시 같은 의견으로 Basuchoudhary & Shugart (2007)는 정치적 자유가 탈냉전 이후에는 테러를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성숙과 테러의 발생에 관한 반대의 의견으로 Kurrild - Klitgaard (2006) 등은 민주주의가 테러리스트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Krueger & Maleckova (2003), Krueger & Laitin (2008), Bloomberg & Hess (2008) 등도 비슷한 의견으로 시민의 자유가 테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Basuchoudhary & Shugart (2007)은 테러의 발생에 대해 정치적이거나 시민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했으며 Basuchoudhary & Shughart (2007)는 정치적 요인은 테러의 발생에 훨씬 영향이 없다고 했다.

Tilly (1978)는 혁명, 파업, 반란 그리고 정치적 테러 사건 등은 상호 연관된 현재의 정치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비정부 정치단체는 정치적 표현이 허락되는 사회에서 정부가 정치적 억압을 하지 않는다면 박탈(deprivation)이 정치적 폭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독재국가에서 시민들은 물질적인 착취가 있더라도 불만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정부의 탄압이 있다면 테러리즘과 같은 활동은 억제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Lai (2007)도 독재국가에서는 테러의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정치적 탄압과 반대의 의견으로 Piazza (2006)는 탄압(Repression), 정당체제 등의 정치적 요소는 테러의 발생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고 하였으며 Krueger & Maleckova (2003)는 정치적 탄압이 테러발생의 주원인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 등 정치적 영향요소와 테러의 발생 원인에 관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정치적 특성들인, 각 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조직적 분쟁, 그리고 폭력성 시위가

테러의 발생에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다.

1) 정치적 불안정 (Political Instability)

정치적 불안정성에 의한 테러의 발생에 대한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Piazza(2006)는 이란, 남아프리카 및 콜롬비아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계급투쟁이 정치적 폭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다당제 시스템을 가진 국가에서는 잦은 선거, 성립하기 힘든 연립정부, 과격주의자, 국가 정책의 혼선 등으로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다당제 시스템의 국가가 정치폭력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Midlarsky(1988) 역시, 라틴 아메리카나 중동에서는 불평등과 정치적 폭력 가능성 사이에는 강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Douglas Hibb (1973)은 정치적 폭동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이전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부의 강압적 행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Turk(1982)도 테러리즘은 전통적인 권위의 붕괴와 새로운 제도의 창출의 노력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하여 정치적 불안정성을 테러의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Lawrence & James (1980)는 1968 ~ 1978년간 16개 나라들의 테러의 통계분석을 통해서 테러리스트 활동의 억제나 감소를 위해서는 개혁보다는 오히려 억압적인 수단이 유용하다고 하였다. Krisztina, Helge & Gunther(2010) 역시, 독재적 정치시스템은 테러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줄이는 강압적인 장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개된 사회가 테러리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은 테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강압이나 독재적인 통제수

단이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라며 Tilly(1978)나 Lai(2007)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독재적인 정치체제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테러의 발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조직적 분쟁(Organized Conflicts)

Piazza(2006)는 테러의 발생요인에 대한 정치적 요인 중 하나인 조직적 분쟁이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단체에 대한 정부 탄압의 부재는 테러리즘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왜냐면, 과격단체들이 정부의 감시, 투옥, 혹은 고문 등이 없다면 정치적 폭동을 계획한다던지 혹은 실행할 기회를 더 갖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탄압이 없는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국가기관의 법집행을 제한하거나 대테러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법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탄압이 오히려 테러리스트 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매우 탄압이 심하거나 비민주적인 정치구조를 가진 사회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정치적 표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아마도 유일한 수단으로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적 수단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기관의 법집행 제한에 관한 사례는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의 경우 대테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대테러 법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리스 정부는 테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다른 유럽 국가들이 테러가 사라지는 추세에도 경제적 불황과 폭력성 시위로 사회적 혼란이 조성되어 테러가 지속 발생하였다.

Campos & Gassebner (2009)은 시민전쟁, 게릴라 전투 혹은 폭동 등은 테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안전한 정권유지는 테러 발

생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Lai (2007)도 국가 간 전쟁 혹은 시민전쟁은 테러를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Piazza (2008)도 실패한 국가 (Failed State) 혹은 전쟁 중에 있는 국가에서 더 많은 테러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Krisztina, Helge & Gunther (2010) 역시 물리적 충돌은 테러가 발생하기 좋다고 하고 있다.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 필요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폭력사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허약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Li (2005)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군사적 충돌은 테러의 발생을 줄인다고 하였다.

조직적 분쟁의 한 형태로서 테러가 재래식 전쟁보다는 강도가 약한 정치, 군사적 활동의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는 저강도 분쟁 (Low Intensity Conflicts)[6] 일종으로 광범위한 영역의 또 다른 형태의 전투와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조직적 분쟁이 테러발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 폭력성 시위(Violent Demonstrations)

정치적 요소의 또 다른 표현인 폭력성 시위도 테러 발생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한 국가에서 폭력성 시위가 많이 발생된다면 이것이 테러의 발생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신동련(2005)은 인간사회의 갈등은 엄청나게 많으며 테러가 인간사회의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중 하나가 폭력성 시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성 시위가 정치적 표현의 한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인간사회의 갈등이 바로 테러로 발전할 수 있다는

6)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 LIC)이란 정치단체의 정책이나 목적의 순종을 강요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제한된 정치, 군사력의 사용으로 주로 3세계에서 발생한다. 분쟁이 지역적이고 국지적이지만 이념적, 정치적인 성격으로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 타국가로의 확산 가능성이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Low_intensity_conflict. 검색일 2013. 10. 16)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는 폭력시위의 증가로 인해 2000년 초반기 주춤했던 그리스 사회에서 다시 무정부주의자들과 좌익 테러리스트의 활동이 재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폭력적 시위가 테러의 발생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2. 경제적 요인과 테러와의 관계

경제 범죄와 관련하여 빈곤이 불법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어 역시 테러발생의 중요한 인자로 인식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 경제적 요인은 테러의 발생과 무관하다는 연구도 있다.

Lichbach (1989)는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폭동의 한 요소라 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폭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그러나 Krueger & Jitka Maleckova (2002)은 팔레스타인 자살폭탄 행위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매우 다양했으며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자살폭발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을 때 각계 분야에게 지지를 표명했다. 여기서 그들은 더 부유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보다도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살테러를 지지하거나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테러를 지원하거나 활동하는 주요변수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Piazza (2006) 역시 테러사건이 발생한 상위 10개 국가 및 테러발생으로 인한 사상자 수가 많이 발생한 10개 국가들의 경제적 요소인 HDI (Human Development Index), GINI Coefficient, GDP Growth, 인플레이션, 실업률 및 Calories per capita[7]를 가지고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7) Calories per capita는 average daily per capita 라고도 하며 테러리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로 예측되며 일일 섭취 칼로리가 낮을 경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낮으며 높은 기근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며 만약 빈곤이 테러의 발생에 유효하다면 Calories per capita는 테러리즘 발생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 경제 및 사회적 개발과 테러현상은 복잡할 수 있겠으나 테러의 발생에 의미 있는 요소를 찾지 못하여 경제적 어떤 요인도 테러의 발생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Krueger & Jitka Maleckova (2003)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Krueger & Maleckova (2003)는 사망한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은 더 교육을 잘 받고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테러발생이 경제적인 주요 요소인 빈곤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또, 폭력범죄의 발생은 경제적인 기회와 무관하다고 하였고 만약 폭력범죄가 경제적인 기회와 무관하다면 테러리즘 역시 경제와 무관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이 테러리즘과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역시, De Mesquita (2005)도 경기침체기에 많은 사람들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려고 해도 테러 조직은 오로지 가장 유능하고 교육 잘 받고 부유한 사람들을 받아들인다고 분석하여 경제적 요소와 테러의 발생은 무관하다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빈곤, 물질적 박탈,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와 테러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이들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없다고 하는 것도 있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경제적 요소의 각 주요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테러발생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1인당 국민소득 (GDP per Capita)

Fearon & Laitin (2001)은 1인당 국민소득이 시민전쟁의 발생과 역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Collier & Hoeffler (2000) 역시 1인당 국민소득이 시민전쟁의 발생과 역의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시민전쟁으로 설명하고 있어 1인당 GDP가 높은 경우 시민전쟁, 정치적 폭동을

비롯한 테러의 발생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Blomberg & Hess (2008) 역시, 1인당 GDP가 높으면 테러의 발생은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 Krisztina, Helge & Gunther (2010)은 Bomber & Hess (2008)와 Lai (2007)의 연구를 통해 테러 활동과 1인당 GDP는 역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자들은 1인당 GDP가 높아지면 테러의 발생, 정치적 폭동, 혹은 시민전쟁은 낮아진다고 연구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Krueger & Jitka Maleckova (2002)는 143개국을 조사하여 1인당 GDP는 테러의 발생과 무관하다고 하였다. 또, Krueger & Maleckova (2003)의 연구에서도 1인당 GDP와 테러의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Freytag (2009)와 Lai (2007)은 1인당 GDP가 증가되면 테러리스트 활동이 증가시킨다는 연구를 하였다. Kurrild-Klitgaard (2006)와 Freytag (2009)의 연구에서도 양자의 관계에는 긍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 Krisztina, Helge & Gunther (2010)은 GDP의 증가와 함께 테러발생이 현격이 증가한다고 하여 Freytag (2009)와 Lai (2007)의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요소인 1인당 GDP와 테러 발생과의 상관관계는 GDP의 증가는 테러발생에 역으로 작용하는 연구가 있고 전혀 무관하다는 연구도 있고, 반대로 GDP의 증가는 테러의 발생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1인당 GDP를 비롯한 제 경제적인 요소가 테러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계량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실업률(Unemployment Rate)

Piazza (2006)의 연구에서 실업률은 테러의 발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률이 채워지지 않는 경제적 기대로부터 고통 받는 게으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촉발시키고 거(Gurr)의 상대적 박탈이론[8]에 의해 정치적 폭동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다.

테러의 발생사례연구는 아니나, 비슷한 연구로 독일은 1990년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발의 폭력을 경험하였는데 Krueger and Pischke (1997)는 독일 전체 543개의 카운티(County)에서 실업률과 인종간 충돌(Ethnic Violence)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평균 교육수준과 평균 제조 임금도 외국인에 대한 폭력과는 무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동독지방에서 외국인에 대한 폭력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서쪽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형적 특색에 따른 법 집행의 실패와 과거 공산주의 시절 억압받았던 적개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Alan & Jitka, 2003). 이와 같이 경제적 요소인 실업률 역시, 테러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는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는 연구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니계수(Gini Coefficient)[9]

---

8) 비합법적 폭력의 원인으로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을 거(Ted R. Gurr)가 체계화한 '상대적 박탈감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이 잘 설명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론은 '좌절 공격 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으로 "기대와 실제 간의 괴리" 또는 "가치 기대와 가치 능력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박탈감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신생국들이 정치적 독립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급격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과 실제로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삶 간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사회, 심리적 긴장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고 있다.

9) 이탈리아 경제학자 C.Gini가 정립한 '지니의 법칙'(Gini's law)에서 나온 용어로서 소득분배 등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으로부터 도출되는데, 횡축에 인구의 누적백분율을 놓고 종축에 저소득층부터 누적백분율을 취해서, 불평등도는 균등선과 로렌츠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나타나는데, GINI 계수는 완벽하게 평등한 분포로부터 벗어난 가정들의 수입과 소비의 분포 정도를 나타낸다. GINI는 0(완벽한 평등)에서 100(완전한 불평등)까지 측정된다(NAVER 백과사전).

Piazza (2006)는 GINI 계수가 높은 값은 높은 수준의 테러리스트의 활동이 동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Edward & Mitchell (1990)은 1973 ~ 1977년간 85개국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을 대상으로 토지의 불공정 분배보다도 수입 불평등이 좀 더 정치적 폭력에 대해 중요한 인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Turk (1982)도 테러리즘은 불평등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적 결과라고 했다.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지니계수도 한 국가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테러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와 주요 선진국에서 수입의 불평등이 정치적 폭력 등 테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연구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 즉 Gini계수가 높은 국가로 칠레가 있다. 계량분석과 더불어 칠레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Gini계수와 테러발생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사회적 요인과 테러와의 관계

1) 폭력범죄(Violent Crime)

Taylor (1988)는 사회적 배경, 교육의 기회 혹은 성취가 테러리즘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다고 기술하였다.

먼저, 폭력범죄의 경우 Becker(1968)는 개인들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과 범죄행위를 하는 것 사이에서 그들이 최대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면서 범죄를 범하는 것과 관련하여 체포 후 형벌의 크기, 오명 혹은 도덕적 고통 등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범죄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델에서 범죄와 관련된 보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이 떨어지면 범죄는 증가할 것이고 형벌이나 체포의 위험이 커지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2) 무기 접근성(Access to Weapons)

대부분의 국가는 총기 등 무기류와 관련하여 법률이나 헌법 등으로 명시하여 총기관리를 하고 있으나 각 국가마다 역사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1세 성인은 누구나 간단한 절차에 의거하여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미국의 독특한 소문화의 한 형태인 총기 문화는 수정 헌법 2조[10]에서 개인의 총기 보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총기 휴대가 자유 국가의 수호와 자기방어를 위한 전통의 산물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손영호, 김상민, 2000).

역시, 국민의 총기 소유권에 관한 美대법원의 판례(2008. 6. 26)는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고 있는 무기 소지권을 개인에게까지 인정하였다.[11] 이에 따라, 개인의 총기 휴대는 폭력범죄를 증가시켰고 총기는 살인 범죄의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다.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적이지 않은 개인적 목적 달성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 총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테러의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무기를 테러의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세계평화지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세계평화지수(GPI)에서도 각국의 평화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무기 접근성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연구에서 테러는 곧 폭력성이고 총기 등 소형무기는 테러 활동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

---

10) 수정헌법 제 2조 :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11) 무장 경비대 소속의 딕 앤서니 헬러(Dick A. Heller)가 총기를 가정에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워싱턴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여 제기한 소위 District of Columbia vs. Heller 소송사건에서 미 대법원은 워싱턴 DC가 개인의 총기 소유를 불법화하려는 것은 수정헌법 2조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5대4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손영호, 인문과학논집 제 42집)

문이다. 또한, 많은 테러사건에서 테러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과거에는 칼을 사용하였으나 작금에 와서는 휴대성, 간편성, 그리고 은닉성의 좋은 수단으로 총기를 테러의 대중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포효과 및 다량 살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어 총기, 폭발물 등의 효과성과 접근성 용이는 의도하고자 하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쉽게 테러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 테러발생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테러발생요인으로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된 폭력범죄와 무기 접근성은 멕시코의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의 테러는 마약 거래에서 오는 마약 카르텔간 혹은 마약 카르텔과 정부, 그리고 일반 시민사이에서 이들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과 관련되어 발생한 테러를 마약테러리즘이라 하고 있다. 조직의 이익,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이들의 폭력범죄와 불법 무기류의 유통은 멕시코에서의 테러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제 3절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

1. 평화의 개념

평화란 인류의 이상으로서 모든 민족과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고귀한 가치로 여겨왔다. 어떤 경우는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하고, 체제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평화라는 이념으로 위장하여 현상을 유지하려고 해서 오히려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관경(2009)은 평화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개념이라 하였다.

최관경(2009)은 평화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서양에서의 평화개념으로는 힘의 평화, 현상고착의 평화, 그리고 정의와 사랑의 평화로 요약하였고, 동양에서의 평화는 정신적 만족, 전쟁이 없는

상태, 사람과 사람사이, 나라와 나라사이, 하늘과 땅 사이의 올바른 질서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평화의 종류로 평범한 평화와 위대한 평화,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 국내평화와 국제평화 등을 거론하였고 특히,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대해서는 소극적 평화란 전쟁의 반대개념으로서 직접적 폭력·물리적 폭력, 폭동, 테러, 전쟁의 부재상태를 의미할 때의 평화라고 하였고, 적극적 평화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제거됨으로서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 복지, 건강, 부유, 기쁨, 축복 등 일체의 긍정적인 모든 가치의 집약으로 완성된 완전한 상태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참된 평화란 소극적인 뜻의 '전쟁이 없는 현상 유지' 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뜻으로 전쟁이 없으면서 동시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 또는 조건"이라고 하였다.(최관경, 2009 : 6)

이성우(2009)는 평화에 대한 개념으로 국제관계에서 주어진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의적 및 다차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힘의 의한 평화', '계약에 의한 평화', '구성체간의 조화(unity)', '절대적 조화(harmony)'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으로서 포괄적인 어휘인 관계로, 이에 대한 정의와 계량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학문적 개념으로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는 전쟁의 부재(absence of war)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는 전쟁의 부재는 물론 정의의 현재(presence of justice)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평화의 정의와 더불어 세계평화지수연구와 관련하여, 한 국가의 평화로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이유로 ⅰ) 평화의 개념정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어진 국가의 평화를 단일의 지표로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ⅱ) 복수의 지표를 선정하고 이들의 수치를 합산하는 방식의 합산측정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ⅲ) 주어진 국가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집단적 특성을 측정하는 종합측정의 방식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

라서 그는 국제관계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에 해당되는 국력(power), 평화(peace), 협력(cooperation), 갈등(conflicts)과 같이 국가의 정책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량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였다.

2. GPI (Global Peace Index) 개념과 산출지표

평화는 전쟁의 부재 그 이상이다. 완벽한 국가는 경찰이나, 감옥 혹은 범죄가 없는 국가일 것이다. GPI에서는 평화의 정의를 "폭력의 부재(Absence of Violence)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국내·외 평화를 측정한다.

GPI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제적인 사업가이자 자선가인 Steve Killelea에 의해 만들어졌다. GPI는 국가들의 평화에 대한 상대적인 측정지수다. 이 지수는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12]에 의해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평화전문가 그룹과 국제 연구소 등에서 개발되고 만들어진다. 2007년 최초 만들어진 이래, 매년 각국의 평화지수가 부여되고 순위가 매겨진다. 최초 2007년에는 121개국에서 2011년은 153개국으로 매년 국가의 숫자와 지표는 업데이트되고 있다.

세계평화지수 (GPI)는 지난 2007년부터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13]에서 매년 거의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23개의 지표들을 측정하여 1 ~ 5점 척도로 점수화하고 순위를 부여하는 지수이다. 그래서 낮은 점수를 갖은 국가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고 반대로 높은

12)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he EIU)은 Economist Group의 계열사이다. 각 국을 대상으로 정치와 사회환경변화를 감안한 경제, 산업 환경과 국가 정보에 대한 공시적 분석과 중장기적 예측을 제공하는 국제적 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관이다.

13)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는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IEP는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고 연구결과는 공개하고 있다. IEP는 Aspen Institute,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Center for Strategic and Studies 및 Cranfield University 등 국제적인 싱크탱크, NGOs, 학교 기관 등과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점수 받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평화롭지 않는 것으로 지수는 설명하고 있다.

23개의 지표[14]는 전문가 패널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다. 여기서 평화의 측정은 Galtung(1969)의 "폭력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23개의 지표로 평가되는 평화지수와는 별도로 33개의 경제 및 사회 지표(Economic and Social Iindicators)[15]가 있고 이 지표와 GPI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으로 두 지수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지수(Index)는 23개의 질적 및 양적 지표(Indicators)로 구성되었다.[16] 예를 들면, 해당 국가의 군사비 지출에서부터 이웃하는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까지 국내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Indicators)들은 국제적인 학계, 사업가, 자선가 그리고 평화단체 등에 의해 선별된 것이다.

국제 전문가들이 국가의 추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바, 미소(微小)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있어 인구가 1백만 이상이거나 국가의 면적이 2만 ㎢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Luxembourg)가 제외된 것이다. 2011년 지정된 153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99%를 차지하며 전 세계 면적의 87%를 차지한다. 참고로, 2011년도의 경우 GPI 평균은 2.05(1 ~ 5 scale 기준)로 2010년 2.02로 조금 상승했으며 2009년도 1.96보다도 높았다.

3. GPI 비판 및 의의

Ali C & Lin (2012)에 의하면 GPI는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GPI는 평화에 대한 이론적 모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GPI는 폭력의 부재에 의해서만 평화를 정의하고 있고 폭력에 대한 명확

14) 부록 : GPI 평화지표(23 peace Indicators) 참고

15) 부록 : GPI 참고지표(33 economic and society Indicators) 참고

16) 최초에는 24개의 지수였으나 2008년에 하나가 빠져 23개다.

한 측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지표들에 대한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된다고 하였다. 둘째는, 평화에 대한 가중치가 임시적인 방법에 의해 측정이 되어서 똑같은 값을 다시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통계가 적절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성우(2009) 역시, GPI의 한계를 지적하였는데, 먼저 1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은 현실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GPI는 한 국가의 평화가 1년 동안 변화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평화의 개념정의에서 논의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가 아니라 더 확대된 개념인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계량했다는 점에서 산술적인 통합은 달성했지만 이론적 통합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지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는 포괄성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간결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며 또한, 지표 상호간 중복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의 지표는 다른 지표로의 결과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수의 측정은 계량화의 과정이지만 방법론적 고려보다는 이론적 고려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비판으로 평화지수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관련 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iane Eisler, 2007). 그녀는 수많은 사례들, 예를 들면 2000년 UNICEF 연구를 통해, 이집트의 경우 여성의 90%가 할례를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여아 살해가 여전히 문제라고 하면서, 지금의 지수가 아주 부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PI 지수는 넓게 인식되고 있으며 콜롬비아 대학의 Jeffery Sachs 교수는 GPI가 세계의 주목을 이끄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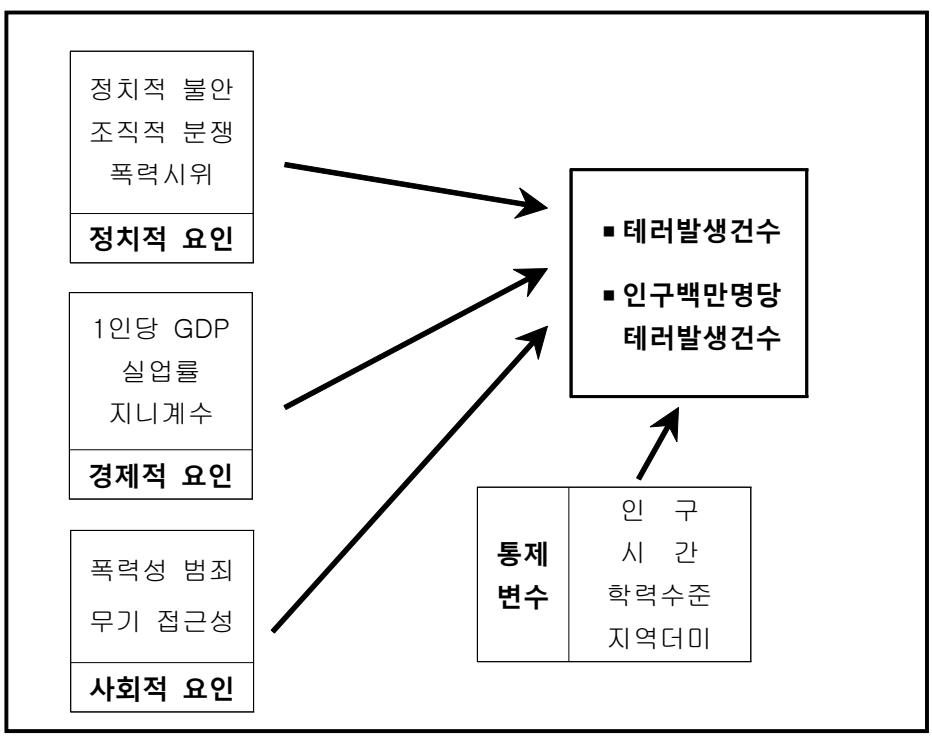
제 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절 연구모형 및 설계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OECD 가입 32개국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종속변수는 테러발생 건수와 인구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이다. 그리고 테러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 정치적 불안정, 조직적 분쟁, 폭력성 시위, 경제적 요인으로 1인당 GDP, 실업률, 지니계수, 그리고 폭력성 범죄와 무기접근성 등의 사회적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국가 간 특성 비교에서 각 국가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구수, 시간변수, 학력수준, 그리고 문화적 차이인 지역별 더미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 그림 3 - 1 > 연구분석의 틀



제 2절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이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테러 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 정치적 요소인 '정치적 불안정'이 높으면 테러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정치적 요소인 '조직적 분쟁'이 높으면 테러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정치적 요소인 '폭력시위'가 높으면 테러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경제적 요소인 '국민 1인당 GDP'가 높으면 테러 발생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경제적 요소인 '실업률'이 높으면 테러 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경제적 요소인 '지니계수'가 높으면 테러 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 사회적 요소인 '폭력범죄'가 높으면 테러 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 사회적 요소인 '무기 접근성'이 높으면 테러 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테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요인들 즉, 정치적 요소 3가지, 경제적 요소 3가지 그리고 사회적 요소 2가지 총 8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가설을 만들었고 이를 계량분석을 통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제 3절 연구의 변수 설정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독립변수들은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의 산출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로 사용된 각 국가별 테러사건 수는 국가정보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테러정세'에서 자료를 사용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OECD 가입 32개 국가의 6년간 테러발생 빈도와 인구백만명당 테러발생 건수[17]를 사용하고 있다.

각 국가별 테러발생 건수는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테러의 발생 건수는 각 국가기관, 연구소 및 학교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은 이론적 논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테러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기관에서는 테러사건으로 분류하지만 어떤 기관에서는 일반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건들을 직접 수집할 수 도 있고 혹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접수를 하여 통계에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그 사건 자체를 접수하지 않아서 통계에서 빠질 수도 있어 사건을 집계하는 기관마다 테러사건 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

---

17) 여기서 '인구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는 각 국가별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함이다. 즉, 인구가 1억이 넘는 국가에서의 테러의 발생이 10건인 경우와 인구가 1백만인 국가의 테러발생이 1건이라 했을 때 인구 1억이 되는 국가가 10건으로 더 많은 테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구 1백만인 국가가 인구수에 비례하여서는 오히려 10배 만큼의 테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를 통제하여 각 국가별로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였다

∴ 백만명당 테러발생건수 = (테러발생건수/인구수) * 인구 1백만명

그러나, 각 국가별 테러사건 발생 건수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 있으므로 국정원에서 만든 자료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즉, 공통적으로 테러사건이 많은 발생하는 나라는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적게 발생되는 국가는 그 발생빈도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 독립변수

1) 정치적 요인

(1) 정치적 불안정성(Political Instability)

정치적 불안정성(political instability)은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분석한 자료이다, 이는 1년 전부터 정치제도가 국민, 경제, 해외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지원하는 정도로 1 ~ 5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숫자가 낮을수록 안정적이며 높을수록 불안전 정도를 나타낸다.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척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차후 2년간 중요한 사회적 불안정의 위험은 무엇인가? ②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대한 헌법적 구조는 어떤가? ③ 야당이나 반대 집단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가? ④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어떤 환경 요건인가? ④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지, 혹은 행정부가 책임은 결핍되어 있는지 혹은 과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가? ⑤ 국제적 논쟁이나 긴장이 경제나 정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은 있는지? 등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2) 조직적 분쟁(Organized conflicts)

조직적 분쟁(organized conflicts) 지수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분석한 지수이며 1년 전부터 당해 연도까지 자국 내에서 발생한 분

쟁의 강도에 대한 질적 측정이며 5점 척도로 나타내고 있다. 숫자가 낮을수록 분쟁이 적고 높을수록 분쟁이 많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6년 기간 동안의 평균점수가 모두 1점이 부여되었고, 한국은 2점, 그리고 본 사례연구에서 나온 터키는 4.08, 스페인은 1.83이고, 32개국 전체평균은 1.48로 집계되었다.

(3) 폭력 시위(Violent Demonstrations)

폭력시위(violent demonstrations) 지수도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분석한 지수로 1년 전부터 폭력시위에 대한 평가지수를 1 ~ 5 척도로 나타낸다. 숫자가 낮을수록 안정적이며 높을수록 폭력시위가 많음을 의미한다. 폭력시위가 테러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은 뒤에 사례연구에서 밝혔듯이 그리스의 경우가 해당된다. 그리스의 경우는 2000년 들어와서 테러가 주춤했으나 높은 실업률과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폭력시위가 증가함에 따라 그 동안 수그려 들었던 좌파세력이나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테러가 증가되었다.

2) 경제적 요인

(1)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

1인당 국민소득은 1년 전 OECD 32개 국가별 개인당 GDP이며 나타난 실제 데이터 값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른 지수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를 만든 Institute for Economic and Peace에서 자료를 구했으나 GDP per Capita는 World Bank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실업률(Unemployment)

실업률(Unemployment)은 1년 전 ILO에서 평가한 실업률(%)로 역시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ILO (International Labour Orgranization, 국제노동기구)는 직업을 잃었거나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둔 사람을 포함해서 직업이 없거나 찾고자 하는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로 규정하였다. 역시, 실제 데이터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가장 최근 수입의 불평등 정도로서 그 출처는 UN Human Development Index,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IU Estimates 이다. 지니 계수는 완전히 평등을 이루는 분포에서 개인 혹은 가정의 수입 분포가 벗어난 정도를 나타고 있으며 실제 값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사회적 요인

(1) 폭력범죄(Violent Crime)

사회현상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폭력범죄(Violent Crime)는 1년 전부터 폭력범죄에 대한 평가지수로 1 ~ 5점 척도로 나타내고 있고 출처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이다.

폭력범죄가 테러리즘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국가는 멕시코이다. 콜롬비아를 비롯하여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이 지역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멕시코의 폭력이 테러리즘의 전술과 전략을 따라가고 조직의 막대한 이익이 마약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다. 이처럼 마약과 관련된 테러를 마약테러리즘 (narcoterrorism)이라 한다.

(2) 무기 접근성(Access to the Weapons)

무기접근성(Access to the Weapons)은 1년 동안 소형 무기 획득 용

이성을 평가하는 지수로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에서 분석하였다. 무기에 대한 정책, 총기허가증 관리 등 엄격히 통제되는 국가는 낮은 접근성으로 낮은 점수를, 반대로 시민의 총기 접근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거나 불법 무기류가 유통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에 대한 높은 접근성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시민이나 조직에서 무기 습득 용이성은 테러발생의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테러의 발생 빈도를 높이고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무기 접근성이 테러의 발생요인중 하나로 판단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헌법적으로 국민이 총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총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미국에서 사들여진 불법 무기류가 허술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 멕시코로 유입되고 유통되어 특히, 마약 카르텔 등이 쉽게 무기를 접하게 되어 테러사건을 부추기고 있는 실태다.

3. 통제변수

1) 교육수준(Mean Years of Schooling)

교육수준은 학교에서 수학한 기간으로 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제 3차 교육[18]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출처는 UNESCO이다. 일반적으로 각 국의 비교에서 교육수준 차이에 따른 국가 간의 차이를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2) 인구수(Population)

18)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 third stage, third level, post-secondary education) : 중등 학교에 이어지는 직업 및 비직업 과정의 총칭

인구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OECD 32개국의 인구수이다. 인구 규모 역시 국가 간 비교에서 국가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제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인구수는 OECD와 World Bank 자료를 참고했다. 한편, 인구수는 계량 분석시 다른 독립변수에 비해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커서 로그를 취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3) 시간 변수

시간적 특성이 테러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시간변수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또, 분석에서는 2012년을 기준 년도로 하였다.

4) 문화 변수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교에서 문화변수는 대륙변수를 더미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대륙 간 문화적 특성을 더미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유럽 (= 1), 아시아・태평양 (= 2), 중동 (= 3), 그리고 남북아메리카 (= 4)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제 4절 분석기법

본 모형의 분석기법은 단순통합회귀모형(Pooled OLS)과 토빗회귀모형(Tobit OLS)[19]을 사용하고 있다. < 그림 3 - 2 >와 같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테러발생빈도가 가지는 절단(Censoring)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

19) 일정한 영역에서만 관찰되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으로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과 절단회귀모형(truncated regression model)이 있으며, 이 중 전자를 토빗모형이라 부른다. 토빗이란 중도절단회귀모형을 최초로 분석한 토빈(J. Tobin)의 이름을 따서 토빈의 프로빗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서 OLS 추정은 종속변수에 있어 0을 포함한 전체 관측치를 대상으로 할 경우와 종속변수에서 0을 제외한 관측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오차항의 정규성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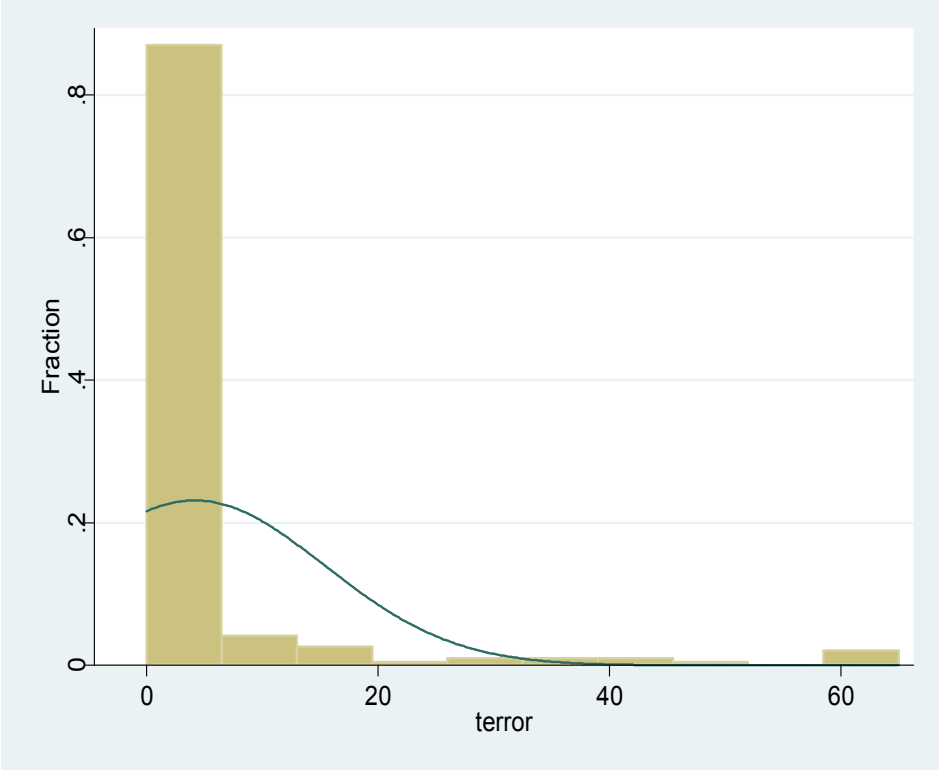
따라서, Tobit 추정은 OLS상에서의 효과가 아니라 특정효과인 Tobit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Tobit 모형과 OLS 모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Tobit 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모두 공통적으로 0으로 나타나는 관측치들이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OLS와 다르게 이들이 가지는 종속변수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고 가정한다.

또한, Tobit 추정은 최우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식[20]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항의 정규성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로지스틱 추정보다 종속변수가 0인 경우에 대해 보다 타당한 추정을 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되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LS 모형을 Tobit 추정치가 보완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실제 추정결과 채택의 범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20) 최우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란, 표본추출시에 관측된 표본값들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값.

< 그림 3 - 2 > 종속변수인 테러발생 빈도의 분포



그림에서 X축은 전체 테러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고 Y축은 테러 발생 건수에 대한 전체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표 4 - 13 >에서도 6년 동안 테러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국가는 5개국, 단 1건만 발생한 나라도 4개국, 2건은 4개국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만으로 전체 표본 192개 중에서 13개국 × 6년 = 78개이고 비율로는 40%를 차지한다. 따라서, < 그림 3 - 2 >에서처럼 첫 번째 막대그래프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본 연구의 특성상 종속변수는 음의 값을 갖을 수 없고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만 값이 나온다. 따라서, 정규성이 아니기 않기 때문에 Tobit 모형으로 보완하였던 것이다.

제 4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절 기초 통계량 분석

기초 통계치는 아래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종속변수인 테러발생건수는 최소 0건에서 최대 65건이다. 또한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는 최소 0건에서 최대 5.47건이다. 그리고 본 분석의 표본 수는 32개국의 6년치 데이터로 총 192개이다.

< 표 4-1 > 기초 통계표

변 수 명	표본수	평균값	표본편차	최소값	최고값
테러발생건수	192	4.14	11.20	0.00	65.00
백만명당 테러발생건수	191	0.23	0.78	0.00	5.47
정치적 불안정성	192	1.28	0.44	1.00	2.80
조직적 분쟁	192	1.48	0.77	1.00	4.50
폭력시위	192	1.90	0.67	1.00	4.00
1인당 국민소득	192	36,134	19,035	7,979	99,462
실 업 률	192	7.61	3.43	1.80	21.70
지니계수	188	33.37	6.85	24.70	57.10
폭력범죄	192	1.73	0.79	1.00	5.00
무기접근성	192	1.97	0.76	1.00	4.00
교육수준	192	15.98	1.69	11.00	20.70
인 구 수	191	39,025,086	58,732,708	1,275,000	313,847,000

제 2절 가설검증 및 분석

1. 정치적 요인과 테러발생

1-1 : 정치적 요소인 '정치적 불안정'이 높으면 테러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 정치적 요소인 '조직적 분쟁'이 높으면 테러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 정치적 요소인 '폭력시위'가 높으면 테러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varepsilon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 \text{ 통제변수 제외}$$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Sigma X_i + \varepsilon \quad \cdots\cdots\cdots \text{ 통제변수 포함}$$

(X_1 = 정치적 불안정성, X_2 = 조직적 분쟁, X_3 = 폭력시위,
ΣX_i = 기타통제변수 : 교육수준, ln(인구수), 시간변수, 대륙더미, ε = 오차항)

< 표 4-2 > 정치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未포함

	테러발생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정치적 불안정성	7.58*** (2.01)	.24 (.18)
조직적 분쟁	7.97*** (1.06)	.45*** (.09)
폭력시위	-2.77*** (.96)	-.11 (.08)
표 본 수 F-값 R-squared	191 74.13 0.5432	191 23.60 0.2746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통제변수를 제외한 정치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치적 불안정성(7.58)과 조직적 분쟁(7.79)이 증가할수록 테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폭력시위가 증가할수록 테러발생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폭력시위가 증가하면 테러의 발생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결과로서 이는, 조사 국가대상이 주로 테러가 발생하는 정치적 후진국가, 다민족 혹은 종교적 갈등이 많은 국가와는 달리, 주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에는 오직 조직적 분쟁(.4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례분석에서는 터키, 스페인의 경우가 조직적 분쟁이 테러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통계분석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표 4 - 3 > 정치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포함

	테러발생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정치적 불안정성	1.93 (2.27)	.08 (.20)
조직적 분쟁	3.65 *** (1.20)	.08 (.11)
폭력시위	-.87 (1.00)	.07 (.09)
교육수준	-.20 (.42)	.10*** (.04)
ln (인구수)	1.22 ** (.48)	-.05 (.04)
유 럽	1.49 (1.76)	-.07 (.16)
아시아/태평양	-1.04 (2.34)	-.31 (.21)

중 동	24.32 *** (4.14)	1.81*** (.37)
2007	1.41 (1.77)	.13 (.16)
2008	2.80 (1.78)	.28* (.16)
2009	1.61 (1.77)	.18 (.16)
2010	2.08 (1.75)	.18 (.16)
2011	1.76 (1.74)	.16 (.15)
표 본 수 F-값 R-squared	191 25.15 0.6488	191 14.45 0.4181

-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 기준년도 : 2012년, 기준대륙 : 아메리카

다음으로는 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보다 엄밀하게 회귀값을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비교연구에 통제변수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수준, 인구수, 대륙간 구분, 그리고 시간변수를 사용했다.

통제변수를 포함해서 분석해 본 결과 정치적 요인들 중 조직적 분쟁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테러발생 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조직적 분쟁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테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3.65건이 발생한다. 그러나 백만 명당 테러발생에는 정치적 요인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다.

정치적 요소 중 하나인 조직적 분쟁(Organized Conflicts)은 GPI 지수에서 1 ~ 5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1은 조직적 분쟁이 적고 안정

하다는 의미이고 숫자가 높으면 그 만큼 조직적 분쟁이 잦고 소요가 많다는 의미이다. 32개국의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부분 1 ~ 2 사이의 분포를 보일 때, 터키와 이스라엘이 각각 6년간의 평균이 4.1과 3.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통제변수로는 인구수와 아메리카 지역보다 중동지역이 테러발생 증가에 그리고 교육수준과 아메리카 지역보다 중동지역이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동국가에서 테러발생빈도가 높이 나왔는데 대상국가 32개국 중 중동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는 터키와 이스라엘이다.

중동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에는 854건, 2011년에는 1,488건의 테러가 발생하였던 지역이다. 이는 전 세계 테러가 2011년의 경우 3,542건이 발생한 것을 비교하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는 최다 테러 발생국인 이라크가 1,220건으로 본 논문에서 채택되지 않는 국가가 포함된 것이다(테러정세, 2011).

터키의 경우 2011년은 2010년 47건에 비하여 65건의 테러가 발생하였다. 이는 이라크에 접경 지역을 근거지로 한, 쿠르드族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PPK)'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테러정세, 2011). 터기는 인종상 터키인이 국민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쿠르드인이 전체의 약 20%로 약 1,400만 여명이 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소수 민족에 의한 분리 독립으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의 경우는 2010년 33건의 테러가 발생하였고 2011년에는 35건이 발생하였다. 역사적, 지역적 특성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지속적인 갈등을 보여 왔으며 이로 인한 테러발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2개 국가, 즉, 터키와 이스라엘이 비록 OECD 회원 국가이기는 하나, 다른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테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 통제변수로서 중동지역이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경제적 요인과 테러발생

2-1 : 경제적 요소인 '국민 1인당 GDP'가 높으면 테러 발생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 경제적 요소인 '실업률'이 높으면 테러 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 경제적 요소인 '지니계수'가 높으면 테러 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Y = \alpha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varepsilon$$

$$Y = \alpha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Sigma X_i + \varepsilon$$

(X_4 = 국민 1인당 GDP, X_5 = 실업률, X_6 = 지니계수,
ΣX_i = 기타통제변수 : 교육수준, ln(인구수), 시간변수, 대륙더미, ε = 오차항)

< 표 4-4 > 경제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未포함

	테러발생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ln (1인당 국민소득)	-3.15** (1.51)	.05 (.10)
실 업 률	.25 (.23)	.01 (.02)
지니계수	.32*** (.12)	.02** (.01)
표 본 수 F-값 R-squared	187 9.42 0.1337	187 2.04 0.0324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통제변수를 제외한 경제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테러발생건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에서는 양의 값을 보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다. 또, 지니계수는 증가할수록 테러발생 건수와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역시 가설 2-3과 같은 결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은 양의 방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테러발생에 통계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다.

<표 4-5> 경제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포함

	테러발생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ln(1인당 국민소득)	-.73 (1.11)	.10 (.10)
실 업 률	.00 (.16)	.00 (.01)
지니계수	.15 (.09)	.01 (.01)
교육수준	-.35 (.38)	.06* (.03)
ln(인구수)	1.29*** (.40)	-.06 (.03)
유 럽	3.97** (1.78)	-.10 (.15)
아시아/태평양	2.05 (2.09)	-.20 (.18)
중 동	36.11*** (2.11)	2.07*** (.18)
2007	1.63 (1.39)	.10 (.12)

2008	3.21** (1.41)	.25** (.12)
2009	.21 (1.46)	.03 (.13)
2010	1.91 (1.39)	.15 (.12)
2011	2.06 (1.40)	.16 (.12)
표 본 수	187	187
F-값	40.36	23.88
R-squared	0.7521	0.5484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다음은 <표 4 - 5>의 경제적 요인이 테러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제변수를 포함했을 때를 살펴보겠다. 경제적 요인인 1인당 국민소득, 실업률, 지니계수는 테러발생건수와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다만, 통제변수에서는 테러발생 건수에서 인구수, 유럽지역, 중동지역 및 2008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에는 2008년도가 2012년보다 그리고, 중동지역이 아메리카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에서 교육수준이 높으면 테러의 발생이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3. 사회적 요인과 테러발생

3 - 1 : 사회적 요소인 '폭력범죄'가 높으면 테러 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 사회적 요소인 '무기 접근성'이 높으면 테러 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Y = \alpha + \beta_7 X_7 + \beta_8 X_8 + \varepsilon$$

$$Y = \alpha + \beta_7 X_7 + \beta_8 X_8 + \Sigma X_i + \varepsilon$$

(X_7 = 폭력범죄, X_8 = 무기 접근성,
ΣX_i = 기타통제변수 : 교육수준, ln(인구수), 시간변수, 대륙더미, ε = 오차항)

< 표 4-6 >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未포함

	테러발생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폭력범죄	2.35** (1.19)	-.10 (.09)
무기접근성	4.27*** (1.23)	.39*** (.09)
표 본 수 F-값 R-squared	191 18.98 0.1680	191 11.02 0.1050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통제변수를 제외한 사회적 요인에서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폭력범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무기접근성이 증가할수록 테러발생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는 무기접근성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폭력범죄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 무기접근성은 테러발생건수와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양(+)의 방향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4-7>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포함

	테러발생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폭력범죄	1.19 (.84)	-.16** (.07)
무기 접근성	2.02* (1.15)	.41*** (.10)
교육수준	-.46 (.40)	.06* (.03)
ln(인구수)	.82 (.50)	-.10** (.04)
유 럽	4.64** (1.96)	.24 (.17)
아시아/태평양	4.16 (2.89)	.35 (.25)
중 동	34.91*** (2.59)	2.06*** (.22)
2007	1.95 (1.75)	.09 (.15)
2008	3.38* (1.75)	.24 (.15)
2009	2.27 (1.74)	.18 (.15)
2010	2.45 (1.74)	.19 (.15)
2011	2.05 (1.74)	.16 (.15)
표 본 수 F-값 R-squared	191 26.89 0.6445	191 13.11 0.4691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통제변수를 포함한 경우 무기접근성이 테러발생 요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유럽지역과 중동지역이 아메리카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테러발생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백만 명당 테러건수에는 폭력범죄가 증가할수록 백만 명당 테러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다. 폭력범죄가 테러의 발생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기 접근성이 증가할수록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통제변수로는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백만 명당 테러 발생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아메리카 지역보다 중동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백만 명당 테러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4. 단순통합회귀모형(Pooled OLS Estimation)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varepsilon$$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Sigma X_i + \varepsilon$$

(X_1 = 정치적 불안정, X_2 = 조직적 분쟁, X_3 = 폭력시위, X_4 = 국민 1인당 GDP,
X_5 = 실업률, X_6 = 지니계수, X_7 = 폭력범죄, X_8 = 무기 접근성,
ΣX_i = 기타통제변수 : 교육수준, ln(인구수), 시간변수, 대륙더미, ε = 오차항)

여기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한 모형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 변수들이 테러 발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려고 한다.

통제변수를 제외한 경우, <표 4-8>에서 보는 것처럼 테러발생건수에 대해서 정치적 불안정성, 조직적 분쟁, 무기접근성 및 실업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테러발생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폭력시위는 테러발생 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 역시 정치적 불안정성, 조직적 분쟁, 무기접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테러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테러의 발생에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폭력범죄는 음(-)의 방향으로 테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8>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未포함

	테러발생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정치적 불안정성	7.35*** (1.89)	.45*** (.16)
조직적 분쟁	7.24*** (.91)	.38*** (.08)
폭력시위	-4.03*** (1.00)	-.06 (.08)
ln(1인당 국민소득)	.37 (1.35)	.22* (.11)
실 업 률	.31* (.16)	.01 (.01)
지니계수	.13 (.11)	.0002 (.01)
폭력범죄	-.44 (.91)	-.18** (.08)
무기접근성	2.49** (1.04)	.23** (.09)

표 본 수	187	187
F - 값	40.39	15.23
R-squared	0.6448	0.4064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다음으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 건수와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4-9>의 결과와 같다.

먼저, 테러발생건수는 정치적 요인인 조직적 분쟁과 사회적 요인인 폭력범죄가 증가할수록 테러발생 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9>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포함

	테러발생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정치적 불안정성	-1.07 (1.91)	.03 (.17)
조직적 분쟁	2.78*** (.93)	.02 (.08)
폭력시위	-1.19 (.94)	.15* (.08)
ln(1인당 국민소득)	.27 (1.49)	.07 (.13)
실 업 률	.06 (.16)	.003 (.01)
지니계수	.14 (.11)	-.01 (.009)
폭력범죄	1.45* (.85)	-.12 (.07)

무기접근성	-.12 (1.13)	.29*** (.10)
교육수준	-.59 (.41)	.05 (.04)
ln(인구수)	1.07** (.43)	-.10*** (.04)
유 럽	3.04 (1.84)	-.02 (.16)
아시아/태평양	2.23 (2.36)	.09 (.20)
중 동	29.43*** (3.40)	1.90*** (.30)
2007	1.41 (1.40)	.13 (.12)
2008	2.76** (1.40)	.29 (.12)
2009	.29 (1.45)	.05 (.13)
2010	1.80 (1.36)	.17 (.12)
2011	1.98 (1.34)	.17 (.12)
표 본 수 F-값 R-squared	187 31.77 0.7729	187 13.86 0.5977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통제변수로는 인구수의 증가와 아메리카 지역에 비해서 중동지역이 테러발생 건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2008년도가 다른 해에 비해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테러발생건수 다음으로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무기접근성과 폭력시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백만 명당 테러발생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통제변수로써는 아메리카 지역보다 중동지역이 백만 명당 테러발생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인구수는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에서 테러의 발생에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토빗 회귀분석 모형(Tobit OLS Estimation)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속변수인 테러발생 건수와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의 경우 제로(0)가 많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단순한 OLS 분석으로는 정확한 회귀계수 값을 추정 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빗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다.

$$Y = \text{argmax}\,(0,\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varepsilon)$$

$$Y = \text{argmax}\,(0,\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Sigma X_i + \varepsilon)$$

(X_1 = 정치적 불안정, X_2 = 조직적 분쟁, X_3 = 폭력시위, X_4 = 국민 1인당 GDP,
X_5 = 실업률, X_6 = 지니계수, X_7 = 폭력범죄, X_8 = 무기 접근성,
ΣX_i = 기타통제변수 : 교육수준, ln(인구수), 시간변수, 대륙더미, ε = 오차항)

앞에서 사용한 OLS 모형과 토빗 회귀분석 모형을 비교해 보면 다음 < 표 4 - 10 >과 같다.

< 표 4 - 10 >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未포함 (OLS모형 Vs. Tobit모형)

	OLS 모형		Tobit 모형	
	테 러 발생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테 러 발생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정치적 불안정성	7.35*** (1.89)	.45*** (.16)	8.91* (3.44)	.65** (.28)
조직적 분쟁	7.24*** (.91)	.38*** (.08)	8.69*** (1.64)	.50*** (.13)
폭력시위	-4.03*** (1.00)	-.06 (.08)	-4.06* (2.57)	.07 (.16)
ln (1인당 국민소득)	.37 (1.35)	.22* (.11)	2.58 (2.57)	.54** (.22)
실업률	.31* (.16)	.01 (.01)	.50 (.29)	.02 (.02)
지니계수	.13 (.11)	.0002 (.01)	.006 (.23)	-.01 (.02)
폭력범죄	-.44 (.91)	-.18** (.08)	-.60 (1.65)	-.25* (.13)
무기접근성	2.49** (1.04)	.23** (.09)	7.31* (2.20)	.70*** (.18)
표본수 F-값 R-squared Log likelihood	187 40.39 0.6448	187 15.23 0.4064	188 -343.53	187 -138.11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Tobit 모형 회귀분석에서는 테러발생건수는 정치적 불안정, 조직적 분쟁, 그리고 무기접근성이 테러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폭력시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OLS 모형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에서는 정치적 불안정, 조직적 분쟁,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무기접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테러 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1인당 국민소득은 앞서 언급했듯이 가설과 반대로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폭력범죄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1인당 국민소득과 폭력범죄가 가설과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포함한 토빗 회귀분석 모형을 살펴보면 <표 4-11>와 같다. 먼저, 테러발생 건수에서는 조직적 분쟁이 증가할수록 테러발생이 3.86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OLS 회귀 값 2.78보다는 회귀계수 값이 더 크다. 통제변수로는 인구수와 아메리카 지역보다 유럽과 중동 지역이 테러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08, 2010, 2011년도가 2012년보다는 더 높게 테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를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무기접근성이 증가할수록 테러 발생건수가 .67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OLS 추정치 .29보다 그 회귀계수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통제변수로서는 아메리카 지역보다 중동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테러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OLS 회귀분석모형이나 Tobit 모형에서 나타난 兩분석 모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중동지역이 상당히 높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 2010 및 2011년이 201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발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4 - 11 >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제변수 포함 (OLS모형 Vs. Tobit모형)

	OLS 모형		Tobit 모형	
	테 러 발생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테 러 발생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정치적 불안정성	-1.07 (1.91)	.03 (.17)	-0.98 (3.50)	.14 (.30)
조직적 분쟁	2.78*** (.93)	.02 (.08)	3.86** (1.72)	.06 (.15)
폭력시위	-1.19 (.94)	.15* (.08)	-1.53 (1.84)	.26 (.16)
ln(1인당 국민소득)	.27 (1.49)	.07 (.13)	1.57 (2.90)	.30 (.25)
실 업 률	.06 (.16)	.003 (.01)	.07 (.28)	.004 (.02)
지니계수	.14 (.11)	-.01 (.009)	.13 (.21)	-.02 (.02)
폭력범죄	1.45* (.85)	-.12 (.07)	1.61 (1.56)	-.16 (.13)
무기접근성	-.12 (1.13)	.29*** (.10)	2.66 (2.32)	.67*** (.19)
교육수준	-.59 (.41)	.05 (.04)	-.79 (.75)	.05 (.06)
ln(인구수)	1.07** (.43)	-.10*** (.04)	2.72*** (0.80)	-.05 (.07)

유 럽	3.04 (1.84)	-.02 (.16)	5.54* (3.34)	.08 (.28)
아시아/ 태평양	2.23 (2.36)	.09 (.20)	3.35 (4.54)	.13 (.39)
중 동	29.43*** (3.40)	1.90*** (.30)	31.92*** (5.84)	2.07*** (.50)
2007	1.41 (1.40)	.13 (.12)	3.52 (2.82)	0.43 (0.24)
2008	2.76** (1.40)	.29 (.12)	5.86** (2.79)	.61** (.24)
2009	.29 (1.45)	.05 (.13)	2.13 (2.88)	.31 (.24)
2010	1.80 (1.36)	.17 (.12)	6.03** (2.67)	.56** (.23)
2011	1.98 (1.34)	.17 (.12)	7.02*** (2.64)	.57** (.23)
표 본 수 F - 값 R-squared Log likelihood	187 31.77 0.7729	187 13.86 0.5977	187 -319.73	187 -123.84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위에서 살펴본 통계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4 - 12 >와 같다. 먼저 OLS 모형과 Tobit 모형의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OLS모형에서는 폭력시위와 폭력범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Tobit 모형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종속변수를 단순하게 테러발생 건수로 했을 때와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로 했을 때 채택되는 가설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 표 4 - 12 > 연구결과의 요약

	가설	OLS 모형		Tobit 모형	
		테러발생 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테러발생 건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
정치적 불안정성	+	기각	기각	기각	기각
조직적 분쟁	+	채택	기각	채택	기각
폭력시위	+	기각	채택	기각	기각
1인당 국민소득	-	기각	기각	기각	기각
실업률	+	기각	기각	기각	기각
지니계수	+	기각	기각	기각	기각
폭력범죄	+	채택	기각	기각	기각
무기접근성	+	기각	채택	기각	채택

즉, OLS 모형에서는 조직적 분쟁과 폭력범죄이 테러발생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백만명당 테러발생건수에 대해서는 폭력시위와 무기접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Tobit 모형에서는 조직적 분쟁이 테러발생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무기접근성이 백만명당 테러발생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obit 모형을 기준으로 선진국 32개국을 대상으로 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영향요인 중에서 정치적 영향요소인 조직적 분쟁,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요소인 무기접근성이 테러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LS 모형에서는 폭력시위와 폭력범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테러발생에 경제적인 영향요소로 선정된 1인당 국민소득, 실업률, 그리고 지니계수는 OLS 모형 및 Tobit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다. 기존 선행연구 중에서 일부는 빈곤 등 경제적인 요소가 테러의 발생의 주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는 통계 결과를 보였다.

제 5장 국가별 테러발생 사례분석

국정원에서 보고한 테러정세에 의하면 지난 6년간 연구대상 32개국 국가 중에는 테러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가 있고 테러 발생이 적은 국가가 있다. 또, 테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여 5개국이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32개국의 연평균 테러발생 건수는 4.1건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나왔고 이중에서 중동지역으로 분류된 터키와 이스라엘이 테러발생 다수 국가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분석하였던 통제변수에서 중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나온 것을 OLS 모형이나 Tobit OLS 모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조사대상 32개국의 지난 6년간 발생한 테러사건을 총 테러건수와 연평균 건수로 분류하여 테러가 많이 발생한 국가부터 정리하면 <표 4 - 13 >과 같다. 터키와 이스라엘이 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로 나오고 있으며 그 외 전체 국가의 평균발생건수인 4.1건을 넘게 나타난 국가로는 그리스 (평균 19.5건,) 스페인 (평균 9건), 멕시코 (평균 7.2건), 영국 (평균 4.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및 슬로베니아는 동 연구기간 6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테러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5 - 1 > 국가별 연평균 테러발생건수 및 순위

국 가	6년간 총발생 건수	연평균테러 발생 건수	발생순위
Turkey	294	49.0	1
Israel	154	25.7	2
Greece	117	19.5	3
Spain	54	9.0	4

Mexico	43	7.2	5
United Kingdom	26	4.3	6
Italy	17	2.8	7
France	14	2.3	8
Germany	13	2.2	9
Belgium	8	1.3	10
United States	7	1.2	11
Chile	7	1.2	11
Sweden	5	0.8	13
Ireland	5	0.8	13
Netherlands	4	0.7	15
Hungary	4	0.7	15
Denmark	4	0.7	15
Australia	4	0.7	15
Canada	3	0.5	19
Switzerland	2	0.3	20
Japan	2	0.3	20
Czech Republic	2	0.3	20
Austria	2	0.3	20
Slovak Republic	1	0.2	24
Norway	1	0.2	24
New Zealand	1	0.2	24

Estonia	1	0.2	24
Slovenia	0	0.0	28
Portugal	0	0.0	28
Poland	0	0.0	28
Korea	0	0.0	28
Finland	0	0.0	28
평 균	**24.8 건**	**4.1 건**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의 테러 사건을 OLS 모형 및 Tobit 모형으로 분석한 바를 사례연구를 통해서 테러의 발생요인을 본 절에서는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발생한 테러의 사건을 분석하였을 때, 단 한 가지 요인에 의해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보다는 다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것처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가 경제적 및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역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이 단 하나의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테러사건의 주를 이루는 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각 테러사건의 발생 요인별로 사례연구를 심층 분석토록 하겠다.

제 1절 「조직적 분쟁」에 의한 국가별 테러발생 사례

1. 터 키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OECD 회원국이면서 NATO 회원국인 터키는 약 7,2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전체 국

민의 98%)이며, 공용어로는 터키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터키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국가이며 유럽,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친서방, 친아랍 균형 외교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이슬람을 수용하여 통합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보존하고 있는 터키는 문화, 윤리,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의 영향으로 현재 터키의 특성이 다양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터키는 연구기간 6년간의 연 평균테러 건수가 49건으로 32개국 중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한 나라로 분류되었다. 이는 이라크 접경지역을 근거지로 한 쿠르드族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쿠르드 노동자당(Kurdistan Worker's Party ; PKK)'에 의해 대부분의 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테러정세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쿠르드族은 전체인구의 약 20%인 약 1,400만 명이며 이중 4,000 ~ 5,000여명이 터키에서, 3,000 ~ 3,500여명이 북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21]하고 있으며, 이 단체는 지속적으로 군, 경찰, 정부시설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1978년 Abdullah Öcalan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단체의 이념은 최초 혁명적 사회주의와 쿠르드族 민족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극좌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며 터기 동남쪽과 북부 이라크, 북동부 시리아 지역에 Kurdish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PKK는 1980 ~ 1983년 군사정권 기간 동안은 테러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정치적 억압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투원을 모집하면서 그들의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Kurdistan 지역의 쿠르드 사람들의 문화, 정치적 권리의 자주적 쟁취를 위하여, 1984년부터는 터키 정부에 무력투쟁을 전개해와 우익단체와 폭력적 충돌을 일삼았다[22]. 1984년부터 2008년간 32,000명의 무장군인, 6,500명의 경찰 등 보안요원, 5,700명의 일반 시민이 PKK 테러활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Bilgel, Karahasan, 2013).

---

21) 2012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 Turkey, U.S. Department of State (2013)

22) 2012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 Turkey, U.S. Department of State (2013)

<그림 5-1> 쿠르드族 주요 분포 및 활동지역(주황색)

그러다, 1989년 민간 출신 대통령인 Turgut Ozal이 취임하여 화해의 노력 결과 PKK는 1993년 3월 최초로 정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同年 5월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 정전은 파기되었다. 1992년에서 1994년 동안 특히 테러가 가장 심했는데, 이 3년간의 연평균 사망자는 1천명에 이르렀다. 1999년 2월 조직 리더인 Abdullah Öcalan이 케냐에서 체포되더 같은 해 9월 그는 PKK 멤버들에게 투항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4번째 정전을 선언하였으며 PKK는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테러활동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겠다고 선언하였다(Bilgel, Karahasan, 2013).

2002년 PKK는 합법적인 조직으로서 운영하고 순수한 정치단체로 남겠다고 하여 KADEK(Kongreya Azadi u Demokrasiya Kurdistan / Kurdistan Freedom and Democracy Congress)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다, 2003년 미국과 유럽에 의해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분류[23]되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KADEK를 해체하고 KONGRA-GEL(Kongreye Gele Kurdistan / Kurdistan People's Congress)로 바꿨다. KONGRA-GEL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목표수립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同 단체는

23) 同 단체는 1997. 10. 8부로 미 국무부의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되었다.

지속적으로 테러활동을 자행하였다(Bilgel, Karahasan, 2013).

그 외, 터키 내 중요한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터키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키려는 反美, 反NATO 견해를 지니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무장단체로 DHKP-C (Revolutionary People's Liberation Party / Front)가 있고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즈볼라와 같은 이름의 터키 헤즈볼라(Turkish Hizballah), IJU(Islamic Jihad Union), Turkish Workers' and Peansnts' Liberation Army 등 테러 단체가 있다.

이중에서 특히, 터키에는 PKK이외에 대부분 수미파로 구성된 악명 높은 터키 헤즈볼라(Turkish Hizballah)가 있다. 이 단체의 목표는 국가를 전복시키고 이란과 같은 엄격한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들의 극단적인 폭력 행사와 급진주의적 특성은 터키 당국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 급진적인 테러단체는 이슬람의 주류에서 벗어난 형태이며 터키사회에서 높은 문맹률, 낮은 교육수준, 부족한 사회적 발달 등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테러 활동을 하고 있다(Ozoren, 2006).

이와 같은 터키 헤즈볼라 근본주의 테러리즘은 급진적인 테러그룹으로 이들의 활동과 이념은 터키의 주요 사회와 대립 및 저항을 일으키고 있으며, 급진주의, 분리주의 및 테러리즘과 같은 주요한 문제가 터키 전역에 걸쳐 되살아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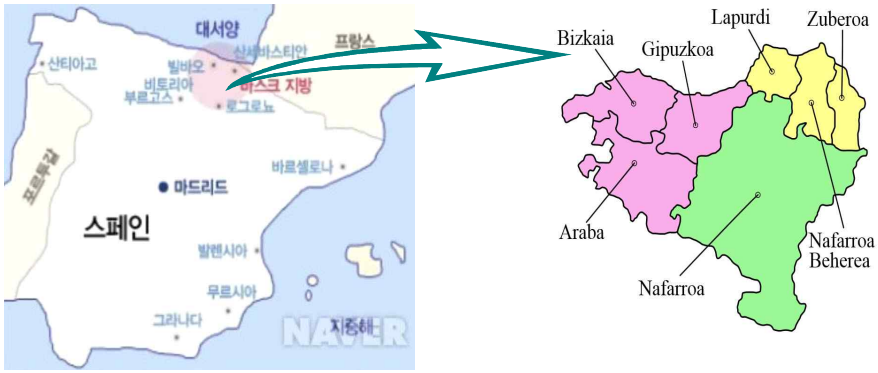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터키에서 발생한 주요 테러요인으로는 정치적 목적의 분리 독립을 위한 쿠르드노동자당(PKK)과 터키 헤즈볼라 등에 의한 무장단체의 조직적 분쟁에 의해 테러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테러정세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 스페인

스페인은 연평균 9건의 테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 동안 테러를 주도 하였던 바스크조국해방 (ETA : Euskadi Ta Askatasuna, 바스크 조국과 자유)에 의한 분리 독립 세력의 활동이 주요

인으로 분석되고 있다(테러정세 2006, 2007, 2008, 2009, 2010).

<그림 5-2> 바스크 지역 위치 및 7개 지방



바스크(Basque)는 대서양 연안 프랑스와 스페인 경계에 펼쳐 있는 피레네 산맥 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4-2>의 오른쪽에서 노란색 영역은 프랑스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분홍색 지역은 스페인에 속하는 곳으로 바스크 자치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녹색 지방(Navarre) 역시 스페인에 속하는데 지역주민의 71%가 바스크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ETA를 비롯한 바스크 지역 분리주의자들은 스페인 중앙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치권을 요구한다. 이들은 바스크가 스페인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한 주요 이유로 바스크 지역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로마 제국이 스페인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거주해 온 원주민의 전통을 줄곧 보존해 왔으며 바스크어는 라틴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독자적인 언어로, 바스크인의 정체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라고 하기 때문이다(이미하, 서울대저널 94호).

이처럼 ETA는 그들의 주 활동지역인 바스크 지방이 문화, 언어 및

24) Basque Country (greater region), 1996년 통계자료
http://en.wikipedia.org/wiki/Basque_Country_(greater_region) (검색일 2013. 4. 14)

역사가 달라 전통적으로 자치 및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하였다. 바스크 민족주의당(PNV)이 망명정부를 만들어 운영했지만 너무 약해 제구실을 못한데다가 스페인의 파시스트들인 프랑코주의자들이 탄압을 계속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1959년 7월 31일에 ETA (Euskadi Ta Askatasuna, 자유조국 바스크)가 만들어졌다[25]. ETA는 바스크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는데, 초기에는 바스크어와 바스크 문화를 보존하는데 비중을 두다가 1968년부터는 무력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었다. 민족주의자들이며 분리주의자들로 무장된 바스크인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1973년에 스페인의 총리인 루이 카레로 블랑코(Luis Carrero Blanco)를 암살하는데 성공한다[26].

또한, 이들 단체의 활동은 주로 피레네 산맥에 있어 검거가 쉽지 않고 바스크 지역 주민들도 이들의 활동 목표에 지지를 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의 통일을 목표로 조직된 IRA (Irish Republican Army, 아일랜드 공화국군)가 2001년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이들과 비슷한 행보를 걸어왔고 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와도 폭탄 제조 기술 습득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미하, 서울대저널 94호).

시민 340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829명을 죽이고 수천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수백 명의 사람을 불구로 만들었으며 수십 명을 납치한 ETA는 스페인과 유럽연합(EU), 미국 등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Wikipedia, ETA)[27].

1939년부터 36년간 지속된 프랑코 독재 정권은 지역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정책을 폈고 1968년 이래 바스크인的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모두 금지되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 처벌의 대상이었다[28]. 이후 프랑코가 사망

25) 한국국방원구원, '바스크-스페인 분쟁', http://www.kida.re.kr/woww/dispute_detail.asp?idx=4 (검색일 2013. 4. 14)

26) 한국국방원구원, '바스크-스페인 분쟁', http://www.kida.re.kr/woww/dispute_detail.asp?idx=4 (검색일 2013. 4. 14)

27) http://en.wikipedia.org/wiki/ETA (검색일 2013. 4. 14)

하는 1975년까지, ETA의 투쟁은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대중의 지지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1977년 자치권 획득 이후에도, 독립 요구에 가까운 보다 광범위한 자치권을 요구하며 주요 정치인에 대한 암살 기도를 비롯한 테러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1987년 바르셀로나의 한 쇼핑센터에서 일으킨 차량 폭탄 테러로 21명의 무고한 사망자가 나오면서 ETA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이미하, 서울대저널 94호).

이후 ETA는 스페인 정부와 평화 협상에 나섰고, 1989, 1996, 1998 그리고 2006년 휴전을 선언하였으나 연달아서 파기하였다. 2010년 9월 다시 휴전을 선언하였고 2011년 10월 최종적인 휴전을 선언하였으며 2012년 11월에는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ikipedia, ETA).

3. 영 국

1) 영국의 역사와 아일랜드의 독립

한 나라의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영국과 아일랜드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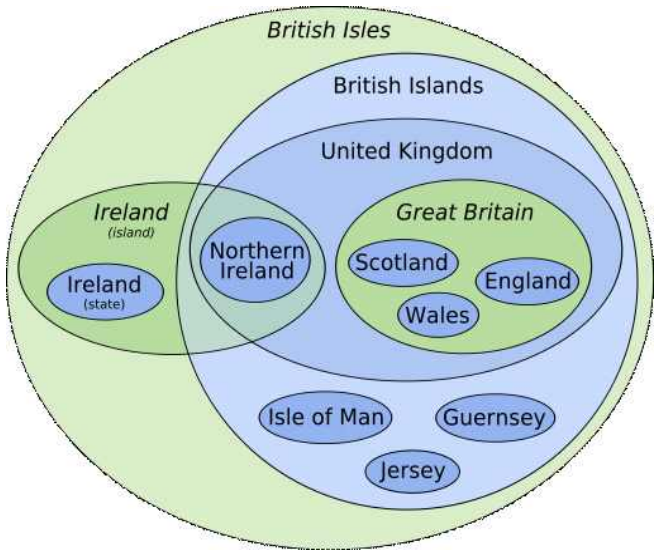
브리튼 제도(British Isles)는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 섬과 아일랜드(Ireland) 섬을 비롯한 주위의 여러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정치적으로는 브리튼 제도의 全 지역이 1922년까지는 영국이라는 단일 국가에 속해 있었으나, 1922년 아일랜드 공화국의 독립으로 현재는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 2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즈(Wales),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4개의 홈 네이션(Home Nation)으로 구성

28) 한국국방원구원, '바스크-스페인 분쟁', http://www.kida.re.kr/woww/dispute_detail.asp?idx=4 (검색일 2013. 4. 14)

되어 있는데 1536년 웨일즈 법(Laws in Wales Acts 1535, 1542)에 의해 웨일즈가 영국에 포함되었고 1707년 연합법(Acts of Union 1707)에 의해 스코틀랜드와 연합이 되어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이 되었다. 또, 1800년 연합법(Acts of Union)에 의해 아일랜드 왕국과 합병되어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으로 합병되어 사실상 기존의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간접통치에서 직접통치로 바뀌는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정치는 소수의 개신교도인에 의해 좌우되어 정치적, 경제적 및 종교적 차별을 받게 된다.

< 그림 5 - 3 > 브리튼 제도의 오일러 도표(Euler diagram)[29]



이러한 개신교도인의 발생 기원은 17세기에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침공으로 식민지가 된 아일랜드를 개신교화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잉글랜드 성공회 등 개신교도인을 아일랜드 북부 지역에 위치한 얼스터(Ulster) 지방에 이주시켰다. 이들은 기존의 가톨릭 신

29) http://en.wikipedia.org/wiki/the_history_of_British_Isles (검색일 2013. 11. 3)

자들을 밀어내고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가톨릭을 억압하는 종교적 갈등을 일으켜 오늘날의 아일랜드가 분리되는 전초를 만들었다. 새로 이주해 온 개신교도인들은 아일랜드 가톨릭 교도에 대한 정치참여를 배제한 채 개신교도인들로만 이루어진 아일랜드 의회를 구성하여 1800년에 영국과의 합병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이후,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을 겪고 빅토리아 시대를 접어들어서는 산업혁명으로 비약적인 발전하였으며 세계 곳곳의 식민지 개척으로 대영제국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후 세계 1, 2차 대전을 겪고 세계 각국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게 되자, 마침내 영국정부는 자유로운 결합체인 영연방을 구성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주의 체제로 개편되었다.

한편, 아일랜드는 1169년 노르만 왕조의 직할령이 되고 그 이후 약 700년간은 잉글랜드의 통치를 받는 한 마디로 투쟁의 역사였다.

아일랜드에 대한 독립의 열기는 부활절 봉기(1916. 4월)로 이어졌으나 영국군에 의해 진압되고 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페인당이 아일랜드인의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신페인당은 1918년 총선에서 다수당이되고 영국의회의 출석을 거부한 채, 아일랜드 공화국의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한다.

이는 곧 1919년부터 1921년 사이 영국군과 아일랜드 공화국군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兩國은 영국과 아일랜드 조약 (Anglo-Irish Treaty)을 통해 전쟁을 종료하게 되고 아일랜드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하게 된다. 1922년 아일랜드가 독립하였으나 아일랜드 북부 지방인 다수의 개신교도들이 정착하고 있는 얼스터 6개 지방은 분리되어 영국으로 남게 되어 아일랜드는 남과 북이 분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영국의 정식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 된다.

그러다 1936년에 설정되었던 영연방의 일원이라는 아일랜드의 지위는 1949년에 탈퇴하여 현재, 아일랜드공화국은 아일랜드의 32개 주 가운

데 영국에 잔류한 북아일랜드 6개 주를 제외한 26개 주를 관할하는 완전한 주권 독립국이 된다.

2) 주요 테러사건과 발생원인

16 ~ 17세기 영국, 스페인, 프랑스 사이에서 발생한 종교전쟁에서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동조한 결과 개신교 국가인 영국의 철저한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신혜수, 1995).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역사적 차별이 바탕이 되어 IRA (Irish Republican Army)는 아일랜드 공화국 무장혁명 군사조직으로 1916년 부활절 봉기 (Easter Rising)를 일으키는 주요 단체로 조직된다. 이후 1919 ~ 1921년간 영국통치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펼치는 가운데 IRA는 명목상 아일랜드 자치 의회 (Assembly of Ireland)의 군대로서 역할은 하나, 의회의 통제가 쉽지 않았다.

영국과 아일랜드간의 조약 (Anglo-Irish Treaty) 체결로 독립전쟁은 종료되었음에도 IRA는 조약을 지지하는 온건파와 아일랜드 전체 독립을 목표로 하는 조약 반대파로 분리된다. 이들의 내전은 조약 반대파의 패배로 끝난다.

그러다 1969년 IRA군사회의 (IRA Army convention)에서 기존의 IRA는 온건파인 OIRA (Official Irish Republican Army)와 급진파인 PIRA (Provisional Irish Republican Army)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흔히 IRA라고 하면 PIRA를 일컫게 된다. 이에 맞춰 신페인 (Sinn Fein) 당도 좌파와 우파로 분열하게 된다. 이런 급진적 IRA는 최초 IRA가 갖고 있던 전통을 이어 받아 영국의 북아일랜드의 통치와 아일랜드 공화국을 부정하였다. 이들은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총력을 다해 공격하겠다는 목표를 갖으나 OIRA는 PIRA의 행위는 단지 편협적인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PIRA는 서방을 반대하는 리비아 등의 지원을 받아 영국군, 영국공

관, 영국정치인 및 영국을 지원하는 아일랜드인을 대상으로 과격 테러활동을 하여 북아일랜드에서의 영국의 철수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과의 통일을 목표로 지속적인 테러를 자행하였다.

그러다, 1994년 IRA는 무기한의 정전을 선언하나 협상에 대한 불만족으로 1997년 철회하고 다시, 2005년 IRA는 완전 무장해제하였다.

지난 30여년간 IRA는 영국 군, 경 등 관계자 1,100여명, 시민 640여명 등 1,800여명의 목숨을 앗았으며 IRA 멤버도 276 ~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추가적으로 신페인(Sinn Fein) 당원도 50 ~ 60여명이 사망하였다[30]. 이와 같이 영국의 주요 테러의 발생의 원인은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배경으로 한 급진 IRA의 무장 독립투쟁 즉, 조직적 분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사례는 IRA의 무장투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테러사례로 지목을 받고 있는 2005년 7월 7일 런던 동시다발 테러는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경악케 하였던 사건이다.

영국 런던도심 4곳에서 연쇄자살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56명이 사망하고 700여명이 부상했다. 2주후 2차 폭탄테러가 있어 앞으로 추가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낳았다. 폭발 이후 '유럽 알카에다 비밀조직'이라는 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고 수사결과 주동자 4명은 모두 영국인으로 모두 자국민들에 의해 발생된 자생테러(Homegrown Terrorism)라는 것이 테러의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다(윤태영, 2010).

경찰의 조사결과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비디오에 따른 본 사건발생의 원인은 서방세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 영국內 무슬림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반발과 실망감 그리고 미국과 동맹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병 등에 반발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윤태영, 2010).

---

30) http://en.wikipedia.org/wiki/Provisional_Irish_Republican_Army (검색일 2013. 11. 3)

고석만 (2005)은 이러한 테러의 또 다른 발생 원인으로 우선 이슬람 근본주의로 전 세계의 이슬람화와 미국, 영국 등의 서구사회를 응징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인다. 또, 자신의 조직의 존재를 재확인하기 위한 조직간의 경쟁이며 주류 사회에 대한 소외감과 불만이라 분석하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영국에 정착한 외국계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대한 영국정부의 지나친 관대함이 이번 런던테러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이상우, 2005)

4. 평 가

이상 터키, 스페인 및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3개국은 다민족국가로 이루어져 역사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강제 통합된 경우다. 이런 중앙통치에 역사, 문화, 언어 및 지리적 이격성 등 상이한 이유로 자신들만의 특유의 민족 정체성을 내세워 완전한 자치 혹은 독립을 요구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소수 민족의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는 갈등 사이에서 소수 민족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게릴라 전술이나 목적달성을 위해 테러의 방법이 동원된다. 이에 따라 정치관료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정부기관, 공공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이 따라 오는 것을 위 3개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직적 분쟁은 앞의 OLS 모형 및 Tobit 모형의 테러발생 건수에서 각각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후진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의 원인을 찾고자 할 때, 본 절에서 다루고 있는 조직적 분쟁이 테러발생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가입국가 등 주요 선진국에서의 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직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테러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량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2절「정치적 불안정」에 의한 테러발생 사례 :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1. 이탈리아 현대사와 테러의 발생

1) 1970년대 이탈리아 테러리즘

1970년대 이탈리아는 석유파동(oil crisis)과 지속적인 물가상승, 악성 인플레이션(runaway inflation)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및 제도적 불신으로 야기된 생산성 급락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단체들로 극우세력과 극좌세력이 출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익 활동의 경우 신파시즘(neofascism) 이념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발생된 테러를 블랙 테러리즘(Black Terrorism)이라 하였고 반면, 붉은 여단(Red Brigades)으로 대표되는 좌익 활동의 경우 레드 테러리즘(Red Terrorism)이라 하여 그들의 사상은 공산주의 이념(Communist Ideology)이 바탕이 되었다. 레드 테러리즘은 학생, 노동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빈곤한 사회적 계급의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의 전복을 목표로 하였다(Vettori, 2007).

1970년대에는 좌익과 우익간의 무장 투쟁으로 이탈리아의 테러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것으로 특징되어 진다. 특히, 1975년 6월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극우파와 극좌파의 상호간의 테러는 이탈리아 사회 분열의 극단적인 면을 잘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 와중에 이탈리아 남부지역에서는 '마피아'라는 폭력단체가 성장하여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다(허인, 2005).

이 시기 (1969 ~ 1979)의 테러리즘은 다음과 같다[31].

첫째, 이탈리아 사회나 여론을 목적으로 테러의 자행이다. 이와 같은

31) Barbara Vettori, 2007,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in Italy from the 1970's to date : A Review", pp. 8 ~ 10.

방법에는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판사, 저널리스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대중의 주의를 끌려는 목적으로 테러행위를 한다. 이는 주로 레드 테러리스트들(Red Terrorists)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공격대상을 다치게 하거나 니캡(kneecap)[32], 혹은 납치를 함으로서 대중의 시선을 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로(Aldo Moro) 前 총리의 납치 및 살해이다. 이는 이탈리아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허인, 2005). 또 다른 수법으로는 우익단체에 의한 블랙 테러리즘의 수법인 정부의 전복과 레드 테러리즘 수법인 공공정책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무차별적인 폭탄공격을 가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 1970년 9월에 열차 폭탄 공격, 1974년 5월에 노동자 시위 학살과 1974년 8월 열차에서의 학살 등이 있다.

둘째는, 붉은 여단이 사용하는 붉은 별, 블랙테러리즘의 수법인 함성(shout)과 같은 심벌이나 모토의 사용이다. 이러한 사용은 내부 구성원들의 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외부인원에 대해서는 테러의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이라 하겠다. 셋째는, 테러 행위에 대한 자신의 소행임을 남기는 수법이다. 특히, 붉은 여단의 경우는 같은 형식의 문구를 남겼다.

그러나, 이 시기는 1980년 8월 볼로냐 역에서 8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막을 내리고 이 테러행위로 NAR(Nuclie Armati Rivoluzionary, 블랙 테레러즘의 한 부류) 등 우익단체의 테러활동이 점차 소멸하게 된다. 또한, 1982년 신파시즘이 선거에서 성공하여 그 해체가 가속된다.

2) 1980년대 이탈리아 테러리즘[33]

1970년대에는 강한 이념이 극단적인 활동으로 이끌어 내어 정치와 사회적인 틈 사이에 테러리즘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1979 ~ 1989)의 테러의 양상은 70년대에 비해 다소 약해졌으나 테러의 특징과

32)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무릎에 쏴서 불구를 만드는 테러의 한 기법

33) Barbara Vettori, 2007,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in Italy from the 1970's to date : A Review", p. 11

정치적 매트릭스(political matrix)는 대체로 비슷하였다. 이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탈리아 경제의 성장으로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 수그러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와 정치적 이념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70년대에 통과한 대테러법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이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주어 차세대의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주춤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즉, 1980년대 이루어진 상대적인 정치적, 경제적 안정은 1960 ~ 70년대를 특징짓던 테러 등 사회적 불안 요소들을 상당 부분 경감시켰다. 이에 따라, 1978년 '붉은 여단'의 모로 수상 암살로 절정에 도달했던 좌익 테러는 1980년대 들어서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우익단체에 의한 테러도 1980년 8월 볼로냐 역사 폭발사건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허인, 2005).

3) 1990년대 이탈리아 테러리즘[34]

1969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이탈리아 테러리즘은 순수히 정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른 정치적 이념에 따라 테러리스트들은 사상을 창출하고 특별한 테러 대상을 선정하였던 것이다.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우익과 좌익 사상이 불분명해져 테러리즘의 구조적 변화가 생겨, 다른 목적을 가진 새로운 이념을 가진 조직들이 출현하였다. 이런 극단적인 조직들은 테러리스트와 국가전복의 혼합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과거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했던 심벌을 사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적대감을 보였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강한 사상적 이념을 가지고 있으나 순수하게 좌익이나 우익의 성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들 단체의 공격대상이 정치적 단체만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orld

34) Barbara Vettori, 2007,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in Italy from the 1970's to date : A Review", pp. 12～13.

Trade Organization), 세계은행 등의 경제단체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테러단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Black Blocks 같은 단체는 강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면서 WTO, IMF 혹은 McDonald와 같은 경제 주체를 공격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산발적인 테러를 행하지 않고 현존하는 경제단체를 도시게릴라전 등을 통해서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국가 전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BR-PCC (Partito Comunista Combattente)라는 단체는 위의 Black Blocks에 비해 테러리스트 단체에 더 가깝다. 이 단체는 1999년과 2002년 입법자문위원인 교수 2명을 살해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69년부터 1981년간 폭발, 암살, 무장단체간의 시가전 등 정치적 폭력으로 기인된 형태로 거의 2천여 명이 사망하였다[35]. 이후에도 이러한 정치적 폭력이 상당히 감소하였음에도 反 이민주의의 재출현 (re - emergence of anti-immigrant), 신파시즘 (new fascism), 그리고 무장 공산당 단체 및 마피아 범죄 집단으로 인해 간헐적인 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

2. 붉은 여단 (Red Brigades)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탈리아는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극단주의 그룹의 역사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그룹은 볼로냐 (Bologna)에 근거를 두고 1970년대에 형성된 학생들이 만든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가진 붉은 여단 (Red Brigades)이다. 이 단체는 무장투쟁을 하며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이탈리아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조성하였다. 同 기간은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시기로 'Years of Lead'라고 하였다[36]. 사회적 충돌과 전례 없

35) http://en.wikipedia.org/wiki/Years_of_Lead_(Italy) (검색일 2013. 12. 5)
36) http://news.bbc.co.uk/2/hi/3372239.stm (검색일 2013. 12. 5)

는 테러행위가 우익과 좌익에 의해 만연하였다. 특히, 1978년에는 기독민주당 당수이자 전 총리였던 모로(Aldo Moro)를 납치하여 살해하여 테러 활동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이 단체는 유럽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단체로 주로 니캐핑(Kneecapping), 납치, 살인 등으로 테러를 일으켰다. 또한, 공장 파괴와 같은 폭력행사, 은행 강탈 등으로도 그 악명이 매우 높았다. 주 공격대상으로 사회 지도층에 해당하는 정치 지도자, 법조인, 경찰간부가 되었고 또, 反자본주의 목적으로 기업체 및 자본가 등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대상이 선정되는 이유에는 이들이 대중을 억압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통한 혁명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80년대 후반 그룹 멤버들의 대대적인 체포와 근거지 급습과 무기들을 회수하여 이 단체는 서서히 쇠퇴하였으나 여전히 그 명맥은 유지되고 있다. Fighting Communist Party (PCC), Union of fighting Communist (UCC) 등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데, 이들 조직의 목적은 붉은 여단과 동일한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

제 3절 「1인당 GDP」,「Gini 계수」에 의한 테러발생 사례 : 칠레를 중심으로

경제적 요소에 의한 테러의 발생은 경제적 수준이 최하위 국가에서 발생한 테러보다도 중하위 국가에서 가장 많이 테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 등 경제적 요인은 테러 발생의 주요한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lobal Terrorism Index, 2012). 그러나, 본 연구는 OECD 가입 국가 즉, 선진국에서의 경제적 요인에 의한 테러발생의 원인을 찾고자 대상국가 32개국 중 칠레를 선정하였다. 이는 칠레가 빈부격차 즉, Gini계수가 가장 높고 1인당 GDP가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국가로 나왔

기 때문이다[37].

2010년 OECD에 가입한 칠레는 전체 연구대상 국가 중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1.2건의 테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국정원에서는 보고하고 있고 국가별 테러발생 건수 순위로는 11위에 해당된다.

계량분석 즉, OLS 모형과 Tobit 모형을 통해 경제적 요인중 GDP per Capita와 Gini 계수는 테러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가중 하나인 칠레에서 과연 GDP와 Gini계수가 테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고자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칠레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칠레 역사 및 테러사건

칠레는 181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사회계층구조가 남아 있고 가족정치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이 지속되었다. 또한, 강력한 대통령이 등장하나 부유층 지주는 여전히 기득권을 누렸다(Wikipepia).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산층과 노동계급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는 연속된 쿠데타의 발생과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가 반복되었다. 그러다 1960년대에 좌파와 우파의 중간 성향인 기독교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이후 1970년에 와서는 세계 최초로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한다.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통령은 심한 빈부격차 해소,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부의 국외유출 방지, 토지개혁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 은행 등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일련의 성과를 거두지만 보수 우파와 기득권 세력, 자본가, 그리고 군부의 반발이 표면화된다. 여기에 칠레라는 사회주의 국가 출현이 세계 공산주의 국가의 확산과 남미의 장

37) 칠레의 6년 평균 Gini계수는 53.8로 32개국(전체 평균 33.4, 한국 31.6)중 가장 높으며 GDP per Capita는 Mexico(평균 $9,555) 다음으로 낮은 $12,329로 나타났다.

악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아옌데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정권교체 공작을 시작한다. 자본가들의 노동자 해고와 공장폐쇄, 생활필수품 사제기, 군부의 쿠테타 음모, 미국의 국제 구리값 폭락[38], 유통업의 파업, 해외 차관 압력 등으로 칠레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국가 경제는 다시 파탄에 이르게 되고 국민은 고통을 받는다.

그러다, 1973. 9. 11 미국의 지원을 받은 칠레 군부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 참모총장이 이끄는 쿠데타로 대통령궁은 폭격되고 아옌데 대통령은 총을 들고 대항하나 결국 시해[39]되고 정권은 군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정종권, 2011).

1973 ~ 78년 집권 첫 5년간 피노체트 군사정권은 좌익단체에 대한 테러를 성공적으로 억제하였다. 많은 좌익 단체들은 1960년경에 만들어졌으며 쿠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1973년 군부 쿠테타로 인해 좌익 활동가들이 죽거나 국외로 추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대통령 故 아옌데의 조카(Andrés Pascal Allende) 등 몇몇 지도자들은 다시 칠레로 귀국하여 칠레에서 지하조직을 유지하고 군사정권에 대한 무장투장을 전개하였다.

또 다른 몇몇 새로운 좌익테러리스트 그룹이 1980년대 초에 등장하여 1980년대 말 테러공격은 증가하였다. 반면, 경찰 등 치안당국은 우익 테러집단에 대한 체포는 실패한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 치안당국 몇몇 간부들의 묵인이 비공식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테러단체의 움직임에 군사정권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테러리즘으로 규정할 수 있는 대테러법을 공표하였다. 1980년대에 떠올랐던 가장 강력한 테러조직이 FPMR (Frente Patriótica Manuel

38) 칠레 경제가 구리 수출에 의존하여 칠레의 구리 생산량은 2005년 기준 532만 톤으로 세계 전체 생산량의 무려 35%를 점유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39) 그러나 2011년 7월 칠레의 법의학팀이 아옌데의 사망원인은 자살로 공식 발표하였고 그 결과도 가족에게 전달하였다. 아옌데의 딸(상원의원, Isabel Allende Bussi)도 아버지가 굴욕적인 삶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인정했다. http://edition.cnn.com/2011/WORLD/americas/07/19/chile.allende/index.html

Rodríguez)으로 1986년에 M-16 소총과 대전차 화기로 피노체트의 암살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피노체트는 테러단체의 소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피노체트 장군의 군부독재는 국가를 전복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누구든지 억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법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가리기 위한 위장 전술로 법을 근거로 한 국가기관이 일반시민의 처형, 투옥, 기소를 쉽게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군사정권은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은 모두 재판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을 갖추어 체계적이고 만연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법은 피노체트를 법정에 서게 만드는 주요 방해물로 된 것이다[40]. 군 등 사법당국은 지속적으로 테러단체 및 좌익인사들에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활동을 억제하여 피노체트의 16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학살, 고문, 가혹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식 집계된 사망 인원만 3,197명으로 밝혀졌다[41].

1990년에 들어와 선거에 의해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시민 정부가 들어섬으로서 민주주의가 복원되었다. 따라서, 좌익단체의 국가전복 시도를 위한 테러행위나 우익단체에 의한 테러행위의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 테러리즘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수의 테러단체들은 무기를 놓으며 무장투쟁을 멈추나 FPMR에서 분리한 FPMR-A는 가장 적극적인 좌익테러 그룹으로 남아서 지속적인 테러 행위를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 테러와 무력투쟁을 지속하였는데 FPMR-A와 MJL의 테러활동은 1990년에 선출된 Aylwin대통령 집권 1년차 기간 동안 207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1984년 465건, 1985년 401건의 테러사건 발생건수와 비교하더라도 가히 적지 않는 수이며 해당 년도 1984년과 1985년

40)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Pinochet, http://en.wikipedia.org/wiki/Systematic_Human_Rights_Violations_Under_Pinochet#The_Institutionalization_of_Terror (검색일 2013. 5. 2)

41) History of Chile, http://en.wikipedia.org/wiki/History_of_Chile (검색일 2013. 5. 2)

은 군사정권 후반기 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이기도 하였다[42].

이러한 테러활동에 대해 Alywin 정부는 1993년까지 주요 조직의 간부들을 체포하고 약 200여명의 테러리스트들이 기소함으로서 테러단체들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2. 테러발생 원인분석

칠레는 현대사를 통해보면 민주주의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정권 수립, 군부 쿠데타 등의 반복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특히, 우익 정권이나 군사정권이 들어설 때 좌익에 의한 정부대상 테러가 빈번히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복원되어 테러발생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극좌세력에 의한 테러행위는 계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대상 기간(2007 ~ 2012년) 동안에 발생한 테러사건은 주로 무정부주의자들이 주로 점조직으로 활동하여 당국의 추적을 피하면서 인명에 피해를 주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소형 폭발물을 이용하여 관공서나 은행 등 시설물에 피해주는 방법으로 테러행위를 하였다(테러정세 2010).

이와 같이 칠레의 정치, 역사 등을 통한 과거의 테러사건과 연구대상 기간 동안의 최근의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사건은 칠레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테러사건이라기 보다는 좌우 이념대립 등 정치적 요인으로 테러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칠레의 사례연구와 더불어, 계량분석 즉, OLS 모형이나 Tobit 모형을 통한 통계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에 의한 테러의 발생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또한, IEP의 보고서[43]에서도 빈곤, GDP 등 경제적 요인은 테러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와 일치된다.

---

42) http://www.mongabay.com/history/chile/chile-terrorism.html (검색일 2013. 5. 2)
43)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2012 Global Terrorism Index', p. 6

제 4절 「실업률」,「폭력시위」에 의한 테러사건의 사례 : 그리스를 중심으로

1. 그리스 사회와 테러

그리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르네상스, 개혁, 계몽 등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을 때 Ottoman Empire[44]에 의해 지배와 억압을 받고 있었다. 19세기에는 독립을 위해 Ottoman 제국에 대항하여 지속적인 게릴라전을 전개하였고 이것을 그리스 테러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는, 추축국[45]에 대항하기 위하여 게릴라 전술 등 혁명투쟁을 펼쳤으며 이들 단체는 대부분 좌파단체들에 의해 조직되었고 활동하였다.

이러한 그리스의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게 된 것은 군사독재 정권(1967 ~ 1974)의 붕괴 이후부터이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2002년 주요 테러리스트 멤버들이 체포되기까지 유럽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최악의 테러를 그리스는 경험하게 된다.

특히, 1970년대 당시 경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점거하는 등의 폭력과 폭동을 일으켜 자본주의, 제국주의, 관료주의를 공격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同 기간 동안 그리스정부와 사회는 국내 및 국외 테러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국내단체의 경우는 좌파 및 우파 단체에 의해 각각 테러가 자행되었다(Engene, 2004). 이중에서 가장 위협을 주었던 단체는 역사적으로 독립투쟁과 추축국에 대항해 싸웠던 잘 준비되고 조직된 좌익단체였다. 즉, 그리스에서 발생된 대부분의 주요 테러사건은 좌파단체에 의해 행하여 졌다고 볼 수 있다.

---

44) 오토만 (터키) 제국: 13세기 말에서 1922년까지의 구터키 제국.

45) 추축국 [Axis-Powers/Achsenmächte/Potenze dell'Asse, 樞軸國]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싸웠던 나라들이 형성한 국제 동맹을 가리키는 말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세 나라가 중심이었다.

테러단체 중에서 RO-17N은 그리스의 대표적인 테러조직 중 하나로 로빈 후드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테러조직이 목표로 하는 공격대상물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찬사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목표물은 反터키, 反미국, 反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은행과 같은 부유한 기업과 정부기관 등 건물이었던 반면에 인명살상은 최소한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활발히 테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정부는 대테러정책이 시민의 자유를 침범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여긴 사회적 분위기로 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이었고 이에 따라 테러조직이 민주적인 사회를 불안케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는 테러리스트 그룹과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많은 좌익 정치인들이 1967 ~ 1974년 동안 군사독재정부에 투쟁하던 학생운동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1973년 11월 17일 발생한 아테네 폴리텍 폭동 이후, 그리스 국민들은 경찰 등 다른 법집행 기관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 테러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공하였다.

그러다 2002년 주요 테러리스트들의 검거와 2004년 올림픽을 계기로 테러활동이 소강상태를 보여 왔으나 경제적 불황, 청년실업 등으로 反정부 시위가 연일 발생하였고 그러던 중 2008년 한 학생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된다[46].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더욱 거센 폭력시위와 약탈과 방화 등을 일으키며 그리스 정부에 거세게 항의하였고 2002년 이후 잠시 주춤했던 무정부주의자들과 테러단체들이 테러활동을 재개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Itano, 2009).

이렇게 나타난 새로운 테러리즘은 더욱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목표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테러활동의 제2 전성기와 도시게릴라 전투는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Kyriakakis, 2009). 특히, 1980년대 말부

46) 2008. 12. 6 아테네 중심가에서 15세 소년, Alexandros Grigoropoulos이 2명의 경찰관에게 총격을 받아 죽는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쌓였던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 그리스정부의 비효율성과 부패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폭력시위, 폭동, 방화, 약탈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터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좌익 테러리즘이 사라질 때 그리스에서는 그들의 활동이 지속되어 21세기,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는 <표 5-2>에서 보듯이 同 연구기간 동안(2007 ~ 2012) 테러의 발생빈도가 연구대상 32개국 중 연평균 19.5건으로 전체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테러발생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의 실업률은 10.95로 전체 평균 실업률 7.6보다 높았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거리로 나오게 만들어 폭동으로 분출케 하였다.

2. 테러발생 원인분석

대다수의 경우처럼 그리스도 정치적 요인에 의한 테러가 1974년 이후 발생하였으나 21세기 들어서면서 국가부도 위기에 따른 대량해고 등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정부 대항 폭력시위 상황이 계속되는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었고 이을 틈타, 무정부주의자 등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였다(테러정세, 2008). 특히, 反정부 극좌무정부주의 단체에 의한 테러 대상은 자국 內 정부기관,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주재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대사관에 폭탄소포를 배달하는 등 테러를 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익단체도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불황에서 오는 높은 실업율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력시위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을 이용하여 다시 테러리스트의 활동이 재기되는 빌미를 제공하여 실업률과 폭력시위가 테러발생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량분석에서는 폭력시위의 경우 조사대상 국가 32개국의 최근 6년간의 폭력시위 전체평균은 1.9이고 그리스의 폭력시위는 2.7로 나왔다. OLS 회귀분석에서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제 5절 「폭력범죄」,「무기 접근성」에 의한 테러발생 사례 : 멕시코를 중심으로

1.「폭력범죄」에 의한 테러발생

멕시코의 범죄 조직은 마약 밀매, 납치, 강탈, 테러리스트 활동, 그리고 반란 등 전 사회에 걸쳐 다양하게 조직화되어 있다. 특히, 마약 카르텔에 의한 마약 밀매는 멕시코에서 매우 크고, 불법인 비즈니스로 이들의 수익은 엄청나며 미국, 중앙아메리카 등을 넘어 매우 강력하며 위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완전히 다른 범주의 위협을 지니고 있는 멕시코의 조직범죄는 테러리즘의 전술과 매우 유사하다. 멕시코는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의 발생이라기보다는 성격이 다른 마약조직과 연계된 무장세력 간에 의한 테러의 발생이 주를 이루고 있다(Antonio, 2012).

Howard (2012)는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멕시코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관련 폭력사건을 테러리즘으로 간주하고 있다. 희생자가 매우 많으며 사람을 죽이는 형태 또한, 매우 극단적이며 공개적이고 잔인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부의 마약조직 소탕작전에 불만을 품고 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습격할 뿐만 아니라, 마약 카르텔 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고 있어 마약테러리즘(narcoterrorism)이라고 한다.

따라서, 멕시코는 의심의 여지없이 마약 카르텔로부터 테러리즘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의 마약관련 폭력은 테러리즘이고 정치적 현상이라고 동시에 보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범죄 현장에서의 메시지는 적에 대한 경고, 특정지역에 대한 통제 요구, 언론에 대한 위협 등이다. 보통의 국제적 테러리스트 그룹들에 의한 행위와 매우 유사하고 가장 일반적인 목표는 특정지역의 주민을 위협하고 정책당국의 정책을 바꾸기를 강요한다(Antonio, 2012).

최초, 1983년 페루 대통령 Belaunde Terry에 의해 정의된 마약테러리즘은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마약 단속 경찰에 대한 테러공격을 묘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FARC 등이 대표적인 조직이다. 마약의 관점과 테러리즘의 관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행위로 테러조직이나 마약 카르텔에서 마약테러리즘이라는 방법이 사용된다. 다시 말해, 범죄와 테러리즘의 조합이다.

이들 무장단체는 50 ~ 70명 정도로 자동화기, RPGs (Rocket Propelled Granades), 기관총 등 소대규모로 조직되었어 지방경찰이나 연방경찰에서 다루기가 불가능할 정도이다(McCaffrey, 2011). 예를 들면, 전통적인 군사전략을 사용하고 경찰이나 다른 정부관련 기관을 공격의 목표로 삼는다. 또한, 다른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일반 시민을 납치하고 죽인다. 이리하여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세력과 영향권을 확보하고 넓힌다. 그래서, 마약생산자들과 다른 거래자로부터 보호라는 미명 아래 세금을 걷는다(Holmberg, 2009).

이들의 잔학성과 무자비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멕시코는 언론인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직 범죄 혹은 마약 카르텔과 관련 좋지 않을 글이 언론에 나타나게 되면 그 언론인은 얼마 있지 않아 참수를 당하거나 혹은 교량에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메시지를 남겨 또 다른 언론인에게 경고와 협박과 위협을 준다.

또한, 상대 정치후보에 대한 경쟁 및 지지자들 사이에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의 불안정한 치안이 테러의 발생에 큰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약퇴치 등 선거공약을 내거는 정치인에게 무차별적인 테러를 감행한다.

마약 전쟁의 잔혹성은 마약 카르텔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의 주요 인물들을 제거하면 군소 규모의 마약 카르텔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요 조직의 소탕에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멕시코 정부는 기존의 카르텔보다 더 공격적이고 더 잔악해진 소규모 카르텔을 소탕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Antonio,

2012).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거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국가, 왕국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다분히 테러리즘이고 반란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안에서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고 국가나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통제나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Zetas라는 마약 카르텔은 지역사회의 정치적 삶조차 장악하여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결정하고 때로는 지역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이들 마약 카르텔은 이미 권위기관이 되었으며 이 이유로 이들의 단체나 행위들이 정치적 현상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멕시코 대통령 칼데론(Calderon)은 그들의 사업은 더 이상 마약 거래가 아니고 모든 지역을 지배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범죄행위는 국가에 대한 도전이고 전복하려는 행위라고 했다[47]. 이렇듯 이들로 인해 2010년에는 1만5천명이 마약과 관련하여 죽었고 멕시코 테러리즘은 보통 마약과 관련된 폭력으로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6만에서 1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마약 카르텔이 미국에서 지정한 테러리스트에 있지 않은 것은 그들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인 동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Malcolm, 2010). 그들의 존재 목적은 돈 그 자체이다.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돈은 180억에서 390억 달러로 미국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마약 카르텔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 반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49].

멕시코의 사례는 폭력범죄가 테러리즘 전략과 행위를 받아들어 마약테러리즘으로 발전하고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를 무력화시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에서부터 마약 카르텔間 그리고 정

47) http://articles.latimes.com/2010/aug/04/world/la-fg-mexico-calderon-20100805 (검색일 2013. 5. 15)

48) http://en.wikipedia.org/wiki/Terrorism_in_Mexico (검색일 2013. 5. 15)

49)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2 - Mexico, US Department of States

부기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공격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테러리즘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멕시코에서의 폭력범죄와 치안 불안과 공권력의 무력화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은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테러요인이라 할 수 있다.

2.「무기 접근성」에 의한 테러발생

멕시코 사람들의 총기 보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군에 의해 통제를 받는 등 개인이 총기를 구매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멕시코 사회에서 이러한 법이 완전한 무기의 통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마약 카르텔에 의해 사용되는 총기의 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구매된 총기가 국경을 통해 멕시코로 밀반입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과테말라 국경을 통해서 반입이 되는 경우이고, 또 따른 방법으로는 군이나 경찰로부터 훔친 것이다[50].

이러한 문제는 멕시코 군·경 등 정부관계자의 만연한 부패, 멕시코 정부의 제도적 결함, 미국정부기관間 혹은 미국, 멕시코 정부間의 미약한 업무협조 때문이다(Lisa, 2010).

2009년 4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ATF[51]의 자료를 인용하여 멕시코에서 압수된 총기를 추적해 본 결과 90%가 미국에서 밀수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약 조직 간의 폭력을 부추기는 중요하고 확실한 무기 불법시장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누군가 비합법적으로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면 미국 남부 국경지대 총포점에서 총기를 구매하고 이를 바로 자동차나 트럭에 숨겨 거의 당국의 감시에 들키지 않고 국경을 통해 멕시코로 반입될 수 있다고 한다(Lisa,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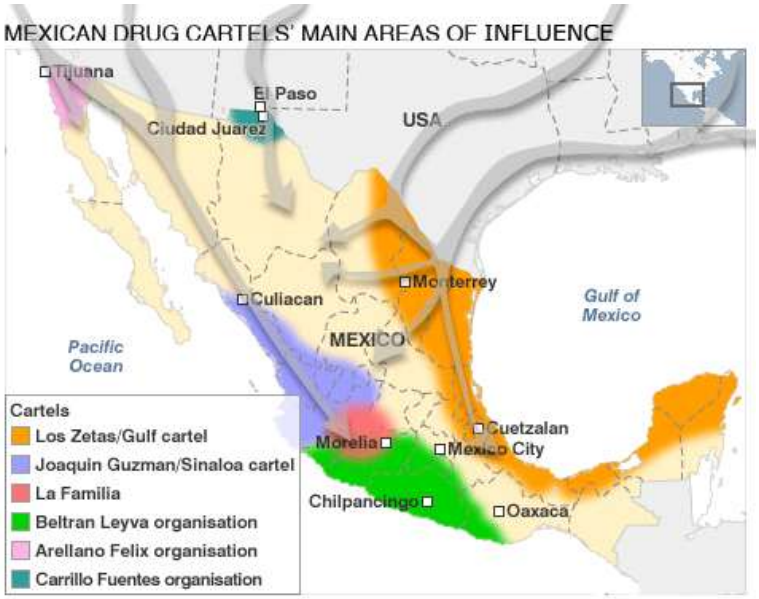
---

50) http://en.wikipedia.org/wiki/Smuggling_of_firearms_into_Mexico (검색일 2013. 5. 15)

51)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그림 5-4>는 미국을 통한 멕시코 내로의 불법무기의 유입을 나타고 있으며 또한,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멕시코 내에는 주요 카르텔이 6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외 40여개의 군소 카르텔이 존재하여 마약 카르텔 간 이권 다툼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림 5-4> 주요 마약카르텔 거점 및 불법무기 유입 경로



또 한편,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무기와 장비의 밀수를 위해 국제 테러리스트와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정확히 입증되지는 못하고 있다[52].

이렇듯 멕시코에서는 엄격하게 총기 등 무기를 규제하고 있으나 불법 총기의 유통과 밀매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테러의 발생을 부추기는 행위로 조직폭력 간 혹은 군 및 경찰 등을 공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52) http://thehill.com/homenews/house/143127-napolitano-warns-lawmakers-of-threat-from-homegrown-radicalization-domestic-terrorism (검색일 2013. 5. 15)

OLS모형과 Tobit모형을 통해 OECD에 가입한 주요 선진국에서의 테러발생 원인으로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에서 무기의 접근성이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왔다. 멕시코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마약 카르텔의 폭력범죄에 사용되는 불법 무기류의 유통이 2004년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멕시코에서의 폭력과 테러리즘의 활동을 더욱 부추겼다고 하는 말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제 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 1절 OLS 모형과 Tobit 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는 OECD 32개국의 최근 6년 동안의 테러발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정치적 요인(정치적 불안정성, 조직적 분쟁, 폭력시위), 경제적 요인(1인당 국민소득, 실업률, 지니계수), 그리고 사회적 요인(폭력범죄, 무기 접근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가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국의 교육수준, 인구수, 대륙더미로 통제하였고 시간의 흐름에서 오는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각 연도별로 시간변수를 통제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인 테러발생 요인이 0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엄격한 추정을 위하여 OLS 추정과 더불어 종속변수가 0이 많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Tobit 모형 추정을 통하여 兩 회귀계수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OLS 모형과 Tobit 모형의 결과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세계 주요 선진국이 32개국이고 최근 6년간 발생한 테러사건을 중심으로 테러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이 된다. 또한, 본 연구가 갖는 특징은 계량분석방법과 사례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해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OLS 모형에서는 조직적 분쟁(2.8), 폭력범죄(1.45)가 테러발생건수에서 테러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폭력시위(0.15)와 무기접근성(0.29)이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에서 조사대상 32개국에서 발생한 테러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Tobit 모형에서는 조직적 분쟁(3.68)이 테러발생건수에서, 무기접근성(0.67)이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테러의 발생요인들 중에서 조직적 분쟁의 회귀계수가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OLS 모형과 Tobit 모형 분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가입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라도 조직적 분쟁지수가 1단위 올라가면 OLS 모형에서는 2.78건의 테러가 더 발생하게 되고 Tobit 모형에서는 테러가 3.86건이 더 증가함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조직적 분쟁 지수는 IEP(Institute for Economic & Peace)에서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를 산정하기 위한 많은 지수 중 하나이다. 어느 한 국가의 조직적 분쟁이 가장 낮을 때 1점이 부여되고 조직적 분쟁이 높아질수록 지수는 올라가 최고 5점까지 부여된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 어떤 이유에서건 집단적 혹은 조직적 반발이 있을 경우 테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한 국가가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법과 질서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조직적인 반발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폭동이나 태업 등을 통하여 잠재적으로 테러의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적 분쟁보다는 회귀계수 값이 낮게 나타났으나 OLS 모형과 Tobit 모형 모두에서 채택된 무기접근성이 모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 선진국에서의 테러발생 주요 요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한 형태로서 총기 등 무기류는 헌법이나 법률 등을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기접근성이 높을수록 인구 백만 명당 테러발생 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총기 등 무기류 관리는 치안뿐만 아니라 테러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

는 중요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총기 휴대 및 폭발물 등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 외국인에 의한 총기류 등의 밀반입, 사제총기류의 제조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Tobit 모형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OLS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폭력시위와, 폭력범죄 역시 선진국에서의 테러발생 주요 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폭력시위의 경우는 그리스의 사례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고, 폭력범죄는 멕시코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테러의 직접적인 발생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 2절 사례연구 분석결과

본 연구는 먼저 OLS 모형을 통한 OECD에 가입한 주요 선진국에 대한 테러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Tobit 모형으로도 함께 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통계분석 기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계량분석이외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사례연구는 계량분석에서 실시한 테러발생 원인에 관한 영향요인 8가지에 대해서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7개 국가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계량연구에서 검증되었듯이 조직적 분쟁이 OECD에 가입된 주요 선진국의 주요 테러발생 원인으로 분석되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조직적 분쟁으로 테러가 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터키, 스페인, 그리고 영국을 선정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테러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터키의 경우는 쿠르드族에 의한 PKK의 활동으로 즉,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무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 무력투쟁은 테러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테러정세의 자료에 의하면 터키가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최근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한 나라로 보고되고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터키의 경우는 PKK에 의한 테러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런 무장 조직에 의한 반발과 분쟁이 테러의 주요 인으로 분석되어 계량분석에서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두 번째 국가로 선정된 스페인도 터키와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이질성이 있는 바스크族의 독립을 목표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였고 이는 터키와 같이 테러행위의 연속이었다. 스페인의 경우도 테러의 주요 발생 원인이 독립을 목표로 하는 무장단체, ETA에 의한 테러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었는 바, 조직적 분쟁이 테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국가로 선정한 영국의 경우도 무장단체인 IRA에 의한 테러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역시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한 무력의 사용이 테러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IRA 즉, 무장단체에 의한 조직적 분쟁이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정치적 불안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테러가 발생한 국가로 이탈리아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 1946년 공화국 수립 이후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테러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이탈리아는 공화국으로 재탄생한 이후 정치적 혼란이 극심하였으며 특히 70년대 석유파동과 맞물리면서 정치단체들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면서 이념적 분쟁이 극심하였다. 이로 인해 좌우파간의 테러행위가 발생하였고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테러 공격 등은 이탈리아 사회를 극심한 혼란으로 빠뜨렸다.

이탈리아는 경제적 불황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이 테러에 영향을 미친 국가로 확인할 수 있으나 계량분석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이 OLS와

Tobit 모형 모두에서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례분석에서 이탈리아의 경우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발생한 테러사건을 분석한 경우이고 계량분석에서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2007 ~ 2012년간의 통계를 분석하고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 20세기 후반에서 발생한 이탈리아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이 테러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분석되나 최근 이탈리아의 경우는 계량분석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치적 불안정이 테러의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는 2000년대 들어와서 이라크 파병국으로서 이슬람 과격세력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국 내에서의 폭탄테러뿐만 아니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지역에서도 폭탄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경제적 요인이 OECD 가입국가에서 발생한 테러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칠레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칠레가 OECD 가입 회원국가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바, 경제적 요인인 1인당 GDP와 Gini계수 등의 경제적 요인이 칠레에서 발생한 테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 분석하였다.

앞장에서 보여주었듯이 칠레에서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테러의 발생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테러의 발생이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계량분석에서 보여주었듯이 경제적 요인은 테러발생에 영향이 없음을 칠레의 사례를 통한 질적 연구에서도 확인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는 지난 2000년대 높은 실업률과 폭력시위로 인해 테러가 주로 발생하여 그리스의 경우 실업률과 폭력시위가 테러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인지를 사례 분석하였다.

폭력성 시위는 OLS 모형의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에서 유의미한 결

과를 보였다. 그리스의 사례는 높은 실업률 등 경제난에 의해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가게 만들었고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충돌로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2000년 이후 잠잠했던 좌익테러단체와 무정부주의자에 의한 테러 행위가 재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역시 실업률도 경제적인 요인으로 계량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으나 사례분석을 통한 그리스의 경우는 무정부주의자들과 좌익단체들의 활동을 재개하는 만드는 구실이 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멕시코의 경우는 마약 카르텔에 의한 폭력범죄가 전체 사회를 지배할 정도이며 불법 무기가 마약 카르텔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치안이 불안한 국가이다. 폭력범죄는 계량분석에서 테러발생 건수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경우이고 무기 접근성은 OLS 및 Tobit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멕시코의 사례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멕시코內의 마약 카르텔간의 분쟁과 군, 경 및 언론인,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범죄의 행위가 테러행위와 유사하다고 하였고 이는 곧 마약 테러리즘이라 하였다.

멕시코의 경우는 폭력범죄가 단순한 범죄를 뛰어넘어 테러리즘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우라 하겠다. 또한, 이런 테러행위를 부추기는 강력한 수단인 불법 무기의 유통은 테러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폭력범죄와 무기 접근성은 테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계량분석의 결과와 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OLS 및 Tobit 분석결과와 사례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최근 자료를 통하여 주요 선진국가인

OECD 회원 국가들을 중심으로 테러 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이 잠재 테러국가라고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가 없었다. 또한, 본 연구는 테러발생 빈도가 잦은 극단적인 국가들, 정치적 후진 국가들 혹은 사회적으로 혼란한 국가 등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선진국 등 한국의 실정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테러 발생 영향요인을 찾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경제적인 요인은 선진국에서 테러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후진국에서는 빈곤이나 빈부격차 등이 테러발생의 주요 요인이라는 일부 연구들도 있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특히, OECD 가입 국가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적인 요인들은 테러발생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례연구를 통한 계량분석의 보완이다. 양적 연구가 갖는 특징은 전체적인, 평균적인 값을 도출해서 특정 국가가 갖는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즉, 본 연구는 양적 연구의 장점인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실증적으로 검정했다는 것과 질적 연구 즉, 사례연구를 통해 최초 이론정립으로 설정한 가설을 바탕으로 테러의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선별하여 심층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테러발생 원인에 대해서 계량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각 국가의 테러잠재 위험성을 찾고 현실에 맞는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의 북한에 의한 군사적 도발과 해외에서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테러사건이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한국도 테러 잠재국으로 지적한 만큼 한국사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원인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제 3절 연구한계 및 미래연구 방향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들에서 최근 발생한 테러사건을 분석하여 주요 테러발생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테러 발생요인에는 문화적 특성 특히, 종교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중동 국가 등 종교간 갈등이 테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수를 찾지 못해서 본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교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대륙더미를 사용했으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현재 분석은 OECD 가입 국가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대상을 확대하여 BRICS[53] 국가와 같은 러시아, 중국, 브라질 등도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들로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는 체첸 등 분리 독립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포함 여부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연구의 한계로 지적했던 후진국가 혹은 종교적 갈등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위한 정치적 갈등이 현저한 국가들이 다수의 테러발생 국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테러사건으로 테러 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테러가 없거나 잠재된 국가에 그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 국가 32개국 중에는 터키와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두 국가는 비록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이나 연구결과에서 보였듯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도 훨씬 많은 테러가 발생하였다[54]. 따라서 차후 이들 두 국가를 제외하고 연구하는 것도 한국 등

---

53) 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 및 남아프리카. 이들 국가는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로 모두 G-20회원국들임.

54) 연구대상 32개국 6년간 발생한 테러건수 전체 795건 중, 터키와 이스라엘에서 발생

주요 선진국에 적용하기에 보다 타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자료의 분산성 및 한계다. 국가별 통계자료는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만든 보고서를 인용하여 통계를 내어, 각 국가별 연간 테러사건 발생건수를 가지고 있으나 이 자료 역시 완벽히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테러의 정의에 따라서 국가별로 발생한 사건이 일반 사건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테러사건으로도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따라서 통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GPI의 비판에서 지적했듯이 각 독립변수로 사용한 정치적 불안정 등 8가지 요소에 대한 지수 역시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인 현상을 정확한 수치로 환산하는 것 역시 쉽지 않는 작업임을 고려한다면 각계 전문가들이 만든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 국가에서 특정 테러발생 요인이 그 나라에서 테러의 발생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사례에서 그리스의 경우 OLS 모형에서는 폭력시위가 테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와 있다. 그리스는 IEP가 발표한 통계에서 연구기간 6년간의 폭력시위 지수는 2.67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는 6년 평균 폭력시위는 3.00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연구를 통한 그리스의 경우 폭력시위가 그 동안 잠잠했던 테러가 다시 발생하게 하는 계기를 주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 그리스보다 폭력시위 지수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나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IEP에서 산정한 각 요소의 지수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겠으나, 한 국가에서 테러의 발생요인이 다른 국가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 있다. 이와 같은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던 것이다.

한 건수는 448건으로 절반이 넘는 56.4%를 차지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가. 단행본

국가정보원, 2006 ~ 2012,『테러정세』, 서울 : 테러정보통합센터.

허인, 2005,『이탈리아사』,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이종원, 2003,『경제경영통계학』, 제 3판, 서울 : 박영사.

정병기, 2009,『논문작성을 위한 스터디 독서』,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Bruce Hoffman, 1999, *Inside Terrorism*, N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USA.

Moghaddam, M. Fathali, 2006, *From the terrorists' Point of View : What They Experience and Why They Come to Destroy*, CA, Santa Barbara : Praenger Security International.

Saul Ben, 2006, *Defining Terrorism in International Law.*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Engene, Oskar, 2004, *Terrorism in Western Europe : Explaining the Trends since 1950.* MA, USA : Edward Elgar Publishing.

나. 논 문

김인걸, 2013, "국가별 테러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이상구, 2010,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이성순, 2006, "뉴테러리즘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대비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정홍남, 2008, "테러리즘확산의 국제정치적 환경과 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김성순, 2006, “뉴테러리즘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대비방안”,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Atin, Basuchoudhary and William F. Shughart Ⅱ, 2007, “On the Ethnic Conflict and the Origins of Terrorism”.

Ali, C. Tasiran and Lin Quao-Yuan, 2012, “Factors to theorise the Global Peace Index”, Middlesex University.

A Joint CSL-HSPI Study, 2011, “The Hybrid Threat Crime, Terrorism and Insurgency in Mexico”, US Army War College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다. 학술지

신동련, 2005, “국제 테러리즘과 문화적 갈등(Global Terrorism and Cultural Conflict)“,『오토피아』겨울 제 20권 제 1호, 89 ~ 112쪽.

김상범, 2002, “현대 테러리즘의 유형과 미래 전망”,『週刊國防論壇』제 903호 (한국국방연구원), 1 ~ 10쪽.

문영석, 2010, “Human Security and Religion : Fundamentalism and Sanctified violence”,『오토피아』여름 제 25권 제 2호, 5 ~ 40쪽.

김창호・김세진, 2011, “테러리스트의 심리적 동기 및 테러발생원인 사례분석”,『한국치안행정논집』제 9권 제 2호, 73 ~ 95쪽.

손영호, 2011, “미국에서의 총기규제와 인종주의”,『인문과학논집』제 42집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87 ~ 103쪽.

손영호・김상민, 2000, “미국의 총기 문화에 대한 연구”,『교육과학연구』제 14집(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51 ~ 168쪽.

최관경, 2009, “21세기의 평화와 평화교육”,『한국교육사상연구회』제 23권 제 1호, 1 ~ 24쪽.

최진태, 2010, “한국의 테러환경 변화분석과 대응방향”,『한국위기관리논집』제 6권 제 1호, 64 ~ 81쪽.

윤태영, 2010,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한국위기관

리논집』 제 6권 제 1호, 82 ~ 100쪽.

이상우, 2005, "영국 런던 테러의 원인분석",『국제지역정보』제 145권, 56 ~ 57쪽,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고석만, 2005, "7·7 런던 테러 이후의 영국 기독교"『목회와 신학』142 ~ 144쪽.

Alan, B. Krueger and Jitka Malecˇkova, 2003, "Education, Poverty and Terrorism : Is There a Causal Conn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7, pp. 119 ~ 144.

James, A. Piazza, 2006, "Rooted in Poverty? : Terrorism, Poor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leavages",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18, no. 1, pp. 157 ~ 177.

Edward, N. Muller and Mitchell A. Seligson, 1987, "Inequality and Insurgen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1, No. 2, pp. 425 ~ 452.

Manus, I. Midlarsky, 1988, "Rulers and Ruled : Patterned Inequality and the Onset of Mass Political Violenc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2, no. 2, pp. 491 ~ 509.

James, D. Fearon and David D. Laitin, 2003,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 1, pp. 75 ~ 90.

Austin, T. Turk, 1982, "Social Dynamics of Terrorism",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463, International Terrorism, pp. 119 ~ 128.

Edward, N. Muller and Erich Weede, 1990, "Cross-National Variation in Political viol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December,* vol. 34, no. 4, pp. 624 ~ 651.

Krisztina, Helge & Gunther, 2011, "On the Origi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rroris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7, Supplement 1, pp. S17 ~ S36.

Joseph, F. Pilat, 2009, "The Causes of Terrorism",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Journal of Organisational Transformation & Social Change,* vol. 6, pp. 171 ~ 182.

Edward Newman, 2006, "Exploring the "Root Causes" of Terrorism"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vol. 29, Issue 8, pp. 749 ~ 772.

라. 보고서

이성우, 2009, "세계평화지수연구의 필요와 방법론",『JPI-21세기 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자료.

Alan, B. Krueger and Jitka Malecˇkova, 2002, "Does Poverty Cause Terrorism? : The Economics and the Education of Suicide Bombers", *The New Republic.*

Barbara Vettori, 2007,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in Italy from the 1970's to date : A Review", *Transcrime*, Universita degli Studi di Trento, Italy.

COT Institute for Safety, Security and Crisis Management, 2007, "Exploring Root and Trigger Causes of Terrorism", *Transnational Terrorism, Security & the Rule of Law,* Netherlands : Danish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Human Rights.

라. 인터넷 사이트

한국국방연구원, 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KIDA-WoWW!-DB) http://www.kida.re.kr/(검색일 2013. 4. 14)

이미하, 서울대저널, http://www.snujn.com/index.php?_filter=search&mid=news&category=488&search_keyword=94%ED%

98%B8&search_target=extra_vars1&page=2&document_srl=3243 (검색일 2013. 3. 22)

정종권, 2011, '칠레 아옌데의 기억', http://blog.naver.com/jjkpssp?Redirect=Log&logNo=10102646410 (검색일 2013. 3. 2)

Basque Country (greater region), 1996년 통계자료 http://en.wikipedia.org/wiki/Basque_Country_(greater_region) (검색일 2013. 4. 14)

Riane Eisler, 2007, "Dark underbelly of the world's most 'peaceful' countries", *Christian Science Monitor,* http://www.csmonitor.com/2007/0726/p09s01-coop.html (검색일 : 2013. 3. 2)

Business Espionage Controls & Countermeasures Association, http://www.becca-online.org/images/Kolaitis_Dissertation.pdf (검색일 2013. 2. 2)

United Nations, http://www.un.org/News/Press/docs/2003/sgsm8885.doc.htm (검색일 2013. 2. 12)

2012 Global Terrorism Index, Institute for economic and peace www.economicsandpeace.org (검색일 2013. 2. 5)

TÜSIAD US Office, http://www.tusiad.us/1927/2012-country-reports-on-terrorism-turkey (검색일 2013. 3. 6)

Nicole Itano, 2009, Global Post, "Greece braces for violence on uprising anniversary", http://www.globalpost.com/dispatch/europe/091116/november-17-greece-terrorism (검색일 2013. 3. 9)

Howard Campbell and Tobin Hansen, 2012, "Extreme Violence and Terrorism in Mexico", Small Wars Journal (검색일 2013. 3. 12)

Lisa Guaqueta, 2010, "Arms Trafficking at the US-Mexico Border", The Mantle, http://mantlethought.org/content/murder-capitalism (검색일 2013. 4. 12)

Antonio Sampaio, 2012, "Mexican Cartels : Crime or Terrorism?",

Kings of War, www.kingsofwar.org.uk/2012/06/mexican-cartels (검색일 2013. 3. 12)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0 멕시코, 터키, 스페인, 칠레, 그리스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1 멕시코, 터키, 스페인, 칠레, 그리스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2 멕시코, 터키, 스페인, 칠레, 그리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fficer of the Coordinator for Counterterrorism, http://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page=search&skip=0&query=Country+Reports+on+Terrorism (검색일 2013. 4. 15)

John Holmberg, 2009, "Narcoterrorism", Geoge Manson University, http://traccc.gmu.edu/pdfs/student_research/HolmbergNarcoterrorism.pdf (검색일 2013. 5. 15)

Malcolm Beith (2010), 'Are Mexico's Drug Cartels Terrorist Groups?' Columbia University, http://www.slate.com/articles/news_and_politics/foreigners/2010/04/are_mexicos_drug_cartels_terrorist_groups.html (검색일 2013. 5. 15)

Suleyman Ozoren, 2006, "Turkish Hizballah : A Case Study of Radical Terrorism", Journal of Turkish Weekly (검색일 2013. 5. 25)

Firat Bilgel, Burhan Can Karahasan, 2013, 'The Economic Costs of Separatist Terrorism in Turkey', The Reseach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s(IREA), http://www.ub.edu/irea/working_papers/2013/201322.pdf (검색일 2013. 5. 25)

Kathryn Westcott, 2004, 'Italy's history of terror', BBC News Online, http://news.bbc.co.uk/2/hi/3372239.stm (검색일 2013. 12. 5)

부 록 : GPI 지표 개념 및 종류[55)]

1. GPI 지표(Indicators) 분류

23개의 지표는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ⅰ)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분쟁(ongo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lict), ⅱ) 사회 안정성(Safety and security in society), ⅲ) 군무장(militariz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의해 질적 지표들에 대해서는 1~5점으로, 양적 지표들(예를 들면, 군사비 지출, 혹은 감옥 수감자)에 대해서는 1~10점으로 부여된다. 그러나, 이 양적 지표들도 비교를 위해 지표들이 1~5점으로 최종적으로 환산된다. 여기서 5점은 가장 위험한 단계의 평화 상태이고 반대로 1점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1)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분쟁에 대한 측정(Measures of ongo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lict)

- 국내외 충돌 횟수(Number of external and internal conflicts)
- 조직적 분쟁에 의한 외부 사망자 추정수(Estimated number of deaths from organised conflict(external))
- 조직적 분쟁에 의한 사망자수(Number of deaths from organised conflict)
- 내부 조직적 분쟁 수준(Level of organised conflict)
- 이웃 국가와의 관계(Relations with neighbouring countries)

(2) 사회 안정성 측정(Measures of societal safety and security)

다음 10개의 지표가 사회 안정성을 측정한다. 예를 들면, 범죄인식,

---

55) 2011 Methodology, Results & Findings, Global Peace Index 번역
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Full_Report_1575.pdf

인권, 자살률 그리고 폭력범죄 등이다. 범죄데이터(Crime Data)는 UN 마약 및 범죄 사무국(UN Office of Drugs and Crime)의 자료를 활용한다.

- 범죄인식(Perceptions of criminality in society)
- 망명자 혹은 난민 숫자(Number of refugees and displaced people as a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 정치적 불안정성(Political Instability)
- 정치적 테러(Political Terror Scale)
- 테러행위 잠재성(Potential for terrorist acts)
- 자살숫자(Number of homicide per 100,000 people)
- 폭력범죄 수준(Level of violent crime)
- 폭력시위 가능성(Likelihood of violent demonstration)
- 수감 인원수(Number of jailed population per 100,000 people)
- 안전요원 및 경찰관 수(Number of internal security officers and police per 100,000)

(3) 무장화 측정(Measures of militarisation)

- 군사비(Military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 무장 군인수(Number of armed services personnel per 100,000 people)
- 재래식무기 수입량(Volume of transfers(import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per 100,000 people
- 재래식무기 수출량(Volume of transfers(export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per 100,000 people
- UN 평화유지 수행에 대한 예산지원
- 중화무기 총수(Aggregate number of heavy weapons per 100,000 people)
- 경량무기 접근 용이성(Ease of access to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 군사능력(Military capability/sophistication)

2. GPI 평화지표 (23 peace indicators)

1~5로 계량화가 안 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전환된다.

$$x = (x - \text{Min}(x)) / (\text{Max}(x) - \text{Min}(x))$$

여기서 Max(x)와 Min(x)는 해당 지표의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값이다. 그리고 각 지표들은 연구팀의 판단에 의해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값들은 다시 내부적 평화요소에는 60%를, 외부적 평화요소에는 40%를 부여하여 최종값이 만들어진다.

< 표 6-1 > GPI 출처 및 정의

지 표	출 처	정의 / 코딩
내부/외부 물리적 충돌회수 (Number of external and internal conflicts fought)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UCDP), University of Uppsala,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Armed Conflict Dataset	• 이 지수는 UCDP에 의해 정의된 충돌을 측정. UCDP에서는 충돌을 "정부가 포함된 두 집단간의 무력사용으로 1년에 최소 25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양립할 수 없는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 • Total number
조직적 분쟁에 의한 사망자 추정수(외부) (Estimated number of deaths from organised conflict (external))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the Conflict in Georgia (IIFFMCG), South Asia Terrorism Portal	• 이 지표도 UCDP의 정의를 사용 • 유엔평화유지 활동으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한 외부분쟁으로 발생한 사망자 수 • Total number

조직분쟁에 의한 사망자수(Number of deaths from organised conflict (internal))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rmed Conflict Database (IISS, ACD)	• 해당년도 내국에서 무장분쟁으로 발생한 군인 및 시민 사망자수 • Total number
조직분쟁 (Level of organised conflict (internal))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1년 전부터 당해연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 •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이웃국가와의 관계(Relations with neighbouring countries)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이웃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질적 평가 •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범죄수준(Level of perceived criminality in societ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인식된 범죄에 대한 질적 평가 •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망명자나 난민의 수(Number of refugees and displaced people as percentage of population)	UNHCR Statistical Yearbook 2009 and the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 해당 국가나 정착지에서 망명자나 난민의 수
정치적 불안정성 (Political instabilit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시민들, 사업가 혹은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인권 경시 (Level of disrespect for human rights (Political Terror Scale))	Political Terror Scale	• 각 국가들은 Amnesty와 US Department County Reports에서 전년도에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1 ~ 5척도로 코드된다. • Qualitative measure, ranked 1 to 5
테러 잠재성 (Potential for terrorist acts)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테러리스트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 •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자살자 수 (Number of homicides per 100,000 people)	UNODC Survey	• 영아살해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가해된 자살
폭력범죄 수준 (Level of violent crim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폭력범죄의 질적 평가 •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폭력집회 가능성(Likelihood of violent demonstrations)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폭력시위의 질적 평가 •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수감자수 (Number of jailed population per 100,000 people)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King's College London	• 인구 10만명당 감금된 사람 • ranked 1 to 5 (69명이하일 경우 1, 280명 이상일 경우는 5로 등으로 코딩)
안전요원 및 경찰관수(Number of internal security officers and police per 100,000 people)	UNODC Survey	• 주방위군이나 민병대와는 다른 경찰 • ranked 1 to 5 (199명이하일 경우 1, 800명 이상일 경우는 5로 코딩 등)
군사비용 (Military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IPRI; EIU analysts	• 중앙 혹은 연방정부가 국방에 들어가는 비용
무장 군인수(Number of armed services personnel per 100,000 people)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징집병, 장기복무 예비역을 포함한 육, 해, 공군 등 모든 인원

재래식무기 수입량(Volume of transfers of conventional weapons (imports))	SIPRI Arms Transfers Project database	• 재래식 무기, 필요한 생산기술의 국제적인 판매, 증여장비, 기술의 이전은 한 국가, 반란군, 국제조직에서 다른 나라나 단체 등으로 이동함을 의미. 재래식 무기로는 비행기, 전차, 대포, 레이더, 미사일, 군함 등 • Imports/Export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per 100,000 people
재래식 무기 수출량(Volume of transfers of conventional weapons (exports))	SIPRI Arms Transfers Project database	
UN 평화유지군에 대한 재정지원 (Financial contribution to UN peacekeeping missions)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 평균 3년간 평화유지군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 현격한 기여 • Total number
중화기 총 수량 (Aggregate weighted number of heavy weapons per 100,000 peopl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 파괴능력에 따라 5가지로 무기를 분류. 장갑차, 대포 1점, 탱크 5점, 전투기, 전투헬기는 20점, 군함은 100점, 항공모함, 핵잠수함은 1000점. 이들은 반군이 아닌 정부군의 소유 • Weapons per 100,000 people
경량무기 획득 용이성 (Ease of access to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무기 획득에 대한 질적 평가 •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군사능력 (Military capability or sophisticati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군사의 정교함에 대한 질적 평가와 군분야의 R&D • Qualitative scale, ranked 1 to 5

3. GPI 참고지표 (33 economic and society indicators)

김인걸(2013)은 GPI에서 정의한 “other economic and societal indicators"를 참고지수라 번역하였다. 이는 평화지수가 각 국의 테러발생빈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참고지수는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고지수’로 표현하여 각 국가의 수준과 능력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하였다. 아래 표는 2011년 GPI 보고서에 나온 각 지표들에 대한 정의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GPI 지표들을 다시 분류하면, 민주주의(democracy), 투명성(transparency), 인구통계학(demographics), 지역 및 국제적 역학구조(regional and international framework), 교육(education), 문화(culture) 그리고 물질적 행복(material well being)으로 분류되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 민주주의와 투명성(Democracy and Transparency)

민주주의와 투명성은 선거절차,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부패인식, 여성국회의원, 성별불평등, 언론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다.

< 표 6 - 2 > 민주주의와 투명성

지 표	출 처	정 의
선거절차 (Electoral process)	EIU Democracy Index	• 유권자가 자유롭게 투표를 하고 선택의 폭이 있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Ranked 1 ~ 10)
정부의 기능 (Functioning of government)	〃	•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들이 정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가? 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는 되어 있는가? (Ranked 1 ~ 10)

정치 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	•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투표율,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에 관여에 관한 질적 평가 (Ranked 1 ~ 10)
정치 문화 (Political culture)	〃	•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화합의 정도 및 종교와 정부와의 분리에 대한 질적 평가 (Ranked 1 ~ 10)
시민 자유 (Civil liberties)	〃	• 국민의 자유에 대한 질적평가로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표현과 시위의 자유가 있는지, 전문적인 조직이나 노동조합을 조직할 자유가 있는지를 측정 (Ranked 1 ~ 10)
부패인식 (Corruption perceptions)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 공공부분 부패의 다양한 전문가를 통한 여론 인식 지수(Ranked 1～10 : 0은 높은 단계의 부패를 의미하고 10은 낮은 단계의 부패를 의미)
여성국회의원 (Women in parliament)	Inter-parliamentary Union	• 여성국회의원 수
성불평등 (Gender inequality)	Gender Gap Index, World Economic Forum	•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회적인 재원과 기회에 대해 얼마나 잘 분배가 되는지에 대한 국가들의 평가지수
언론의 자유 (Freedom of the press)	Reporters Without Borders	• 기자들이나 언론기관들의 언론자유와 이런 자유를 존중하는 각 국가들의 노력을 측정하는 지수

2) 국제적 개방성(International openness)

국제 개방성은 수출과 수입,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방문객수, 순이민(Net migration)으로 구성된다

< 표 6 - 3 > 국제적 개방성

지 표	출 처	정 의
수출 + 수입	EIU	• 수출과 수입의 화물양의 정도
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 as a % of GDP)	〃	• 외국인에 의한 직접 투자 자본
외국인 방문객 수 (Number of visitors as a % of domestic population)	NU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Data	• 관광객과 비영주인을 포함하여 외국인 방문자 수 (Ranked 1 ~ 10)
순 이민 (Net migration as a % of total population)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순수 연평균 이민자수 (Ranked 1 ~ 10)

3) 인구통계학(Demographics)

인구통계학은 15 ~ 34세 남성비율과 성비로 구성된다.

< 표 6 - 4 > 인구통계학

지 표	출 처	정 의
15~34세 남성비율 (Exports + Imports as a % of GDP)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성인인구 비율로서 15 ~ 34세 남성인구
성 비 (Gender ratio of population : women/men)	〃	• 여성인구 대비 남성 인구수

4) 지역 및 국제역학 구조(Regional & international framework)

지역 및 국제역학 구조는 지역통합정도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다.

<표 6-5> 지역 및 국제역학 구조

지 표	출 처	정 의
지역통합정도(Extent of regional integration)	EIU	• NAFTA 나 ANSEAN과 같은 무역 동맹에 관한 질적 측정

5) 교육(Education)

교육은 현재 교육비 지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교육 등록률과 평균교육기간, 성인 지식률으로 측정된다.

<표 6-6> 교육 지표

지 표	출 처	정 의
현재 교육비 지출 (Current education spending as a % of GDP)	UNESCO, Data refer to th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estimate	•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초등학교 입학률 (Primary school enrolment ration)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학교에 입학해야하는 인구수에 대한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수에 대한 비율
중등학교 입학률 (Secondary school enrolment)	〃	〃

고등 교육 등록 (Higher education enrolment)	〃	• 연령에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교육수준에 맞는 연령대의 인구수에 대한 전체 등록 비율
평균교육기간 (Mean years of schooling)	UNESCO, Data refer to th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estimate	• 초등학교에서부터 직업교육까지의 기대 교육기간
성인 지식율 (Adult literacy rate % of population over the age of 15)	〃	• 인구조사를 통한 국가 문자 인식률 추정

6) 문화(Culture)

문화는 외국인이나 사유재산에 대한 적개심, 삶에 있어 종교의 중요성, 그리고 투쟁의지로 측정된다.

< 표 6-7 > 문화 지표

지 표	출 처	정 의
외국인이나 사유재산에 대한 적개심 (Hostility to foreigners/ private property)	EIU	• EIU 분석에 의해 1 ~ 5 점 부여
종교의 중요성(Importance of religion in national life)	〃	• 정치적 혹은 사회적 삶에 있어 종교 중요성에 대한 질적 측정 • Ranked 1 ~ 5(낮음 ~ 높음)
투쟁의지 (Willingness to fight)	〃	• 전쟁에서 싸우려는 시민들의 의지에 대한 질적 평가 • Ranked 1 ~ 5(낮음 ~ 높음)

7) 물질적 행복(Material well being)

물질적 행복은 명목국내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지니계수, 실업률, 기대수명, 그리고 유아사망률로 측정된다.

<표 6-8> 물질적 행복

지 표	출 처	정 의
명목국내총생산 (Nominal GDP, US$PPP bn)	EIU	• 2005년 US$ 구매력에 대한 명목상 국내총생산
명목상 국내총생산 (Nominal GDP US$ bn)	〃	• 명목상 국내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	〃	• 1인당 국민소득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UN Human Development Index 201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IU	• 지니계수는 개인이나 가정의 소득의 분포가 완벽한 분포에서 벗어난 정도를 측정
실업율 (Unemployment %)	EIU	• ILO에서 정의한 실업자는 직장을 잃었거나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일이 없지만 할 수 있고 찾으려는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tors	• 갓난 아이가 살아가는 년도
유아 사망률 (Infant mortality per 1,000 live births)	〃	• 유아사망률은 1천명당 1년 이전에 죽는 유아수

Abstract

The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Causing the Terrorism

Chung, Hyunso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3, the former UN Secretary General, Kofi Atta Annan emphasized the need for understanding fundamental reasons of causing the terrorism[56].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have expressed their views regarding the cause of terrorism and the counterterrorism by researching, analyzing, and measuring each terrorist attack. They concluded that 'the cause of terrorism is very complicated' amongst different opinions in the end. The studies to find out the reasons of terrorism continue on today.

Both domestic and abroad studies have covered all terrorist accidents around the world for the entire period since the World War Ⅱ.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studies that researched the causes of terrorist attacks in advanced countries only.

Also, it is difficult to tell the differences between terrorist attacks happened worldwide and those happened in advanced countries

56) http://www.un.org/News/Press/docs/2003/sgsm8885.doc.htm (February 12, 2013)

when it comes to the reasons of causing terrorism. Because almost all of the terrorist attacks occur at the specific regions, such as the Middle East countries,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unstable countries, and multiracial countries for reasons related to the ethnocracy or different religions. This draw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wo groups.

One of the notable features of terrorist attacks is that it is not dispersed in all countries but tended to occur in regional favoritism. In fact, there were 1,488 terrorist attacks in the Middle East in total of 3,542 terrorist attacks across the globe in 2011(Terror Situation, 2011).

However, the developed countries need to tak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ise of terror as they have experienced increased risks of terrorism, even though the developed countries think that they are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safe. Judging from the literature reviews of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researches have a difficulty to be applied to make detailed action plans for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order to perform this study, it categorizes the causes of terrorism in last 6 years in 32 nations[57] of OECD into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factors and analysed them using OLS Model and Tobit Model.

As a result, the organized conflicts, one of the political factors in the terror occurrence, h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outcome. Also, accessibility to the weapons, one of the social factors in the number of terror occurrence per each million people, was found to have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 Both factors are chosen in OLS and Tobit Models. And not in the Tobit Model but in the OLS Model you

57) excluded 2 nations(Luxembourg, Iceland) in total 34 nations in OECD

can find the result of violent demonstrations and violent crime factors which provide meaningful indication of the effects of terrorism causes in the advanced countri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we should concentrate on the organized conflicts. Racism has been unavoidable and ubiquitous in societies for centuries. In Korea, there are minority groups nearby such as, North Korean defectors, alien workers, marri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f these people feel discriminated against or fail in life due to failure to adapt to their new country it is possible that they will express their complaints to society or government. Or they could resort to violence which is possible to shift to terrorism.

And access to weapons which is one of social factors for causing terrorism is another important requisite we should take notice of as a the result of this study. I suggest that the crackdown on weaponry such as firearms, explosives and so on is the best policy to prevent terrorism and protect our society. Consequently, we should exercise strict control on the manufacture, circulation and possession of all kind of weaponry to any individuals. And there has been media coverage about weapon smuggling by the foreign sailors. This suggest that customs officials should closely check suspicious packages for illegal weaponr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make a realistic and valuable contribution to feed into the debate on domestic counter-terrorism policies.

Keyword : Terrorism, Influence Factors, Cause of Terrorism
Political Factors, Economic Factors, Social Factors
Student Number : 2009-22068